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차 보 고 서





KIEP
2011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새로운 국제지역환경과 대외경제관계,
APEC 및 동북아경제협력,
통일 관련 국제협력분야”

KIEP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연차보고서 2011』을 발간하며



지난 2011년은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한 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경제구조 변화를 연구·분석하는 한편, 글로벌 차원의 경제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외위험요인 진단 및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고찰하고, 글로벌 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분석,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연구, 신국제 통화체제의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국제 단기자본 규제효과 분석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국제경제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국제경제실과 협력정책실 2개 실과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 러시아 CIS,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신흥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신흥지역연구센터, 그리고 지식정보실과 연구조정실 2개 지원부서로 연구원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본원의 각 연구부서에서는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지역통상,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수단 개발,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연구와 관련하여 KIEP 거시계량모형 운영, 국제거시금융 DB 구축사업, 아시아경제 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통상 연구를 위해 DDA 종합센터 및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세계지역연구를 위해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주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전문가 양성, 전략지역 심층연구, 동북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통일대비 정책협의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펼친 성과를 정리하여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기본연구를 비롯해 지난 1년간 연구진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경제연구기관으로서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원장 채 욱

• 발간사	6
• 설립목적 및 연혁	12

I 2011년도 주요 연구성과

1. 분야별 정책기여 현황	14
정책기여 현황	14
무역(FTA/DDA) 정책	15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15
해외시장 진출전략 연구	16
국제거시금융	16
동북아/지역경제협력	17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해외직접투자(ODI)	17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18
공적개발원조(ODA)	18
기타 정책	19
현안자료 발간	19
VIP 보고서 제출	21
2. 사업별 주요 실적	22
가. 기본 연구 사업	22
나. 연구 관련 사업	23
중국 권역별 · 성별 연구단 운영	23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	23
중장기통상전략 운영	24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24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24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25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25
KIEP 국제거시모형 확장 및 업그레이드	25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26
해외유관기관 연구 교류	26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26
동아시아연구 네트워크 강화	27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27
한 · 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27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과 전략 모색	28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추진 지원사업	28
다. 연구 지원 사업	28
정보관리사업	28
전산운영사업	29
출판 · 편집사업	29
대외홍보사업	29
라. 해외사무소 운영	30
미 KED 운영	30
KIEP 북경사무소 운영	30
마. 기타	31
국제세미나	31
정책 · 토론 협의회	32

II 2011년 주요 연구

1. 2011년 연구방향	34
2. 기본연구과제	35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36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38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40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42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44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 · 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48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50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52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5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56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5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60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62
한 ·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6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66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68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70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72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74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76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78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80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82
3. 수시연구과제	84
연구자료	87
Working Papers	103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09
지역연구시리즈	110
Conference Proceedings	112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115
단행본	120
4. 현안연구과제	121
오늘의 세계경제	121
지역경제 포커스	122
북경사무소 브리핑	124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25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26
5. 정기간행물	127
대외경제연구(JEAI)	127
KIEP 2011 Photo News	129

Ⅲ 2012년 연구 계획

2012년 연구방향	136
1.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 거버넌스의 변화 전망	137
2.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적 대응: 소비자편익을 중심으로	138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방안	139
4.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한헛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140
5.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1
6.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42
7.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43
8. G-2시대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시사점	144
9. 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II: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145
10. 저탄소녹색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시사점	146
1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시사점	147
12. 한국 기발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수출, 고용을 중심으로	148
13.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49
14. 최빈개도국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	150
15.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	151
16. 북한의 시장화 실태분석 및 경제체제 전망	152
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153
18.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154
19.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 방안 -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155
20. ASEAN 국가들의 인력수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56
21.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비교와 시사점	157
22.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158
23.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 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159
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160
25. DDA 협상타결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61
26.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협력강화와 대응전략	162

Ⅳ 부록

1. 조직	164
2. 조직별 업무분장	165
3. 2011년 예산 현황	166
4. 연구원 현황	167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 업무영역

-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 및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 국내외 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연혁

- 1989. 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 1989. 12 재단법인 해산 및 특별법에 의한 연구원 설립
- 1990. 1. 17 개원식
KEI 감독 업무, KOPEC 사무국 업무 인수
- 1992. 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립 (10월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 1994. 1 대외경제전문가 「풀」 사무국 설치
- 1995. 3 북경사무소 설립
- 2000. 4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세계지역연구센터로 확대·개편
- 2002. 3 DDA 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설치
- 2005. 12 SNU-KIEP EU센터 설립
- 2008. 5 채 욱 제7대 원장 취임
- 2008. 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확대·개편
- 2010. 2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설치
- 2011. 5 채 욱 제8대 원장 취임
- 2011. 8 2실 1센터 체제로 연구조직 개편



2011년도 주요 연구성과

1 분야별 정책기여 현황

→ 정책기여 현황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

- 핵심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부에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관련 정책 입안 평가, 대외협상 전략 제시, 정상 및 각료 선언문 작성, 협상대표단 참여, 정책 홍보 등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
- 해외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자원개발, 개발협력 분야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우수 정책을 발굴하여 국내 경제의 선진화를 도모

분야별 현황

- 2009~11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기본연구과제 72건, 수탁연구과제 227건, 수시연구과제 81건으로, 총 380건
- 이 중에서 2011년에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분야별로 총 117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

▶ 2010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한 보고서 현황

기여분야	무역 (FTA/DDA) 정책	해외 사례 및 정책연구	해외시장 진출전략 연구	국제 거시금융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투자 (FDI/ODI) 정책	녹색 성장/ 자원개발	공적개발 원조 (ODA)	기타	합계
건수	39	17	10	15	16	3	4	5	8	117

→ 무역(FTA/DDA) 정책

FTA/DDA 정책 기여의 유형

- DDA/WTO 동향분석 및 정부대응 전략 제시
- FTA/DDA 협상타결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 현재 진행 고려 중인 FTA 협상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한·중, 한·일, 한·중·일, 한·인도네시아 FTA 등
- FTA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보완대책 연구: 관세행정, 무역조정지원제도, 원산지 규정,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

▶ FTA/D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수탁연구과제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수시연구과제	주요국의 무역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분야 정책 수립 기여의 유형

- 국내 주요 현안에 관한 해외의 우수 사례 발굴 분석, 시사점 제시
- 양자간 주요 경제현안 분석 제공
- 지역별 정치·경제 변화를 파악하여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대통령 등 주요인사 해외 순방 시 관련국에 관한 심층 자료 제공

▶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주요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수탁연구과제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 - 중국, 일본
수시연구과제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 확대정책 및 시사점

→ 해외시장 진출전략 연구

해외시장 진출전략 연구 분야 정책 수립 기여의 유형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종합적 차원의 지역연구
- 신흥국가의 산업구조, 제도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방향제시
- 기체결 FTA를 활용한 시장진출 방안 연구
- 신흥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연구

▶ 해외시장 진출전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한·EU FTA이후 대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국제거시금융

국제거시금융 분야 정부정책 기여 유형

-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국제거시 동향 및 정책분석
-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모색
- 대외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예측
- 원화의 국제화 및 국내금융 분야 발전방안 제시
- 환율제도 연구 및 환율 예측
- G20 정상회의 대응 전략 및 의제 연구
- 거시금융 분야 주요 세계 연구동향 분석

▶ 국제거시금융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 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수탁연구과제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 대책 연구

→ 동북아/지역경제협력

동북아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협력체 분야 정책 수립 기여의 유형

- 동북아경제협력 관련 정책 도출
- APEC, ASEM, ASEAN+3 주요 의제에 관한 연구
- 지역경제협력체 한국 측 기본입장 마련 및 관련 회의 참석 및 지원
-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마련
- 남북 경제관계 주요 현안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정책 수립

▶ 동북아/지역경제협력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 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수탁연구과제	한-미, 한-중 AEO 상호인정의 경제적 효과와 AEO 공인기업의 혜택에 대한 경제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해외직접투자(ODI)

FDI/ODI 분야 정부정책 기여 유형

-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성과분석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동아시아 역내의 투자활성화 방안제시
-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제시

▶ FDI 및 ODI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
수시연구과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분야 정부정책 수립 기여 유형

-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국제 환경협약 및 주요국 환경정책 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 친환경정책 개발을 통한 국격 제고
- 환경정책을 통한 대외개발 사업추진 방안 제시
- 해외자원 개발 및 플랜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수시연구과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공적개발원조(ODA)

ODA 분야에 관한 정부정책 기여 유형

- 대외원조정책 평가 및 역량강화 방안 제시
- 대외원조를 통한 한국의 위상강화 방안 연구
- 해외공적개발원조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기타 정책

기타 분야의 정부정책 수립 기여 유형

- 기타 대외경제 현안 분석 및 다자간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제시
- 국제회의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 활동

▶ 기타 분야 정부정책 기여 연구보고서 예시

구분	보고서명
기본연구과제	외국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 방안
수탁연구과제	국가 식량안보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자료 발간

- 본 연구원은 해외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분석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국내 경제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
- 대표적인 현안자료인 「오늘의 세계경제」는 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포커스」는 주제별 해외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내 경제관계자의 이해증진에 기여
- 중국경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원의 북경사무소를 통해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국 관련 심층연구자료인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을 발행
- 본 연구원은 현안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온라인 주간 뉴스레터인 KIEP Webzine을 통해 19,000여 명의 구독자에게 전달

▶ 2011년도 주요 현안자료의 예시

구분	보고서명	제출 시기	내용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3.30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 원자력 발전전략, 한 일 경제협력 기조 재 점검 촉구
	중국 인플레이션의 우리나라 전이 가능성과 시사점	4.12	2000년대 이후 중국 물가가 유가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물가상승 요인으로 대두되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11.21	ISD 관련 NAFTA의 투자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ISD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제안
지역경제 포커스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논의의 쟁점과 전망	2.22	재정건전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상향 조정 관련 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 합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서술
	리비아 사태 이후 중동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확산가능성: 주요국별 점검	3.17	리비아 사태 이후 바레인, 예멘, 알제리, 요르단, 오만 등으로의 시위 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 유가 등 그 파급효과 전망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	6.28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가능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그 파급효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1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	5.4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주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양회의 주요 내용 정리
	중국 지방정부 부채 현황과 전망	12.14	중국의 금융안정과 지방정부 재정에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지방정부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서술
중국 성별동향 브리핑	중국의 노동력 부족 현황과 전망: 라오닝성 사례를 중심으로	5.9	라오닝성 사례를 통해 중국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을 분석하고 저임금 노동의존적인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시사점 제공
	중국 동북지역 물류 인프라 건설의 최근 동향: 수륙 연계형 물류 구축	10.18	동북지역의 수륙 연계형 인프라 건설의 최근 동향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해 전망

▶ 연도별 현안자료 발행 건수

현안자료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건)
오늘의 세계경제	42	39	40	121
지역경제 포커스	55	43	50	148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34	30	27	91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	32	27	59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	-	1	1
연도별 합계	131	137	137	420

▶ VIP 보고서 제출

- 본 연구원은 국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매월 전략보고서인 'VIP 보고서'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총 14건을 제출
- VIP 보고서는 현안에 대한 분석 외에도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선제적인 정책수립에 기여

▶ 2011년 VIP 보고서

제출시기	보고서명
1. 5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구조와 시사점
2. 5	북중간 위화도, 황금평 공동개발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3. 4	주요 선진국의 수출확대정책 현황과 대응방향
4. 5	녹색무역장벽의 확산 동향과 대응전략
5. 6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방안
6. 3	정상방문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
6. 14	여론조사 결과보고
6. 14	KIEP 개발협력포럼 참고자료
7. 5	유엔녹색기금 설립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8. 5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
9. 5	TPP 협정의 진행 추이와 한국의 전략적 접근방향
10. 5	인도네시아 경제개발회랑(EDC)
11. 5	한미 FTA 이행준비와 국내대책
12. 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 신(新)대러 협력방안

2 사업별 주요 실적

가. 기본 연구 사업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1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박복영
2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3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허 인
4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윤덕룡
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이동은
6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종화
7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김상겸
8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김영귀
9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영귀
10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조미진
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장용준
12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박월라
13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김규판
14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이재영
15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강유덕
16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권기수
17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김태윤
18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조충제
19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박영호
20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정형근
21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권 율
22	한 중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정형근
23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서진교
24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고희채

나. 연구 관련 사업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 중국의 주요 성별로 지방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함.
- 권역별·성별로 경제동향, 투자환경, 산업구조, 내수시장의 특성, 지방정부 구조, 도시화를 비롯한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수행
- 임금인상, 노사관계 급변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새롭게 변하고 있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등 중국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출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변신 및 전략이 요청되고 있음.
- 권역별·성별 연구 수요 중에서 대중국 비즈니스와 연계되어 시의성이 강조되는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

- 전략적 경제협력 국가(지역)를 중심으로 산업분야와 경제제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 실용적인 지역연구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략적 지역연구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사업을 수행하여 전략국가(지역)들과 장기적인 경제교류 협력 관계의 토대를 구축함.
-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로서 전략지역(국가) 연구 관련 정보, 자료 및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연구자 간에 공유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
- 국내 아시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보고서 작성
 - 무역, 투자, 자원, 에너지, 물류 등 경제협력 분야뿐 아니라, 해당 국가(지역)의 정치·경제적 발전 잠재력과 한국 경제개발경험의 전수 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보고서 발간
- 아시아 주요국(지역) 관련 온라인 DB 및 전문가 홈페이지 구축
 - 인도, 동남아, 중앙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지역)들의 산업, 기업, 자원 및 경제정책 등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내에서 아시아 관련 정보 축적과 확산의 토대 마련

중장기통상전략 운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국제금융질서를 국제금융질서, 국제통상질서, 선진국과 신흥국과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 세계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지역연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0여 개 유망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을 운영함. 분산되어 있는 신흥개도국 전문가, 지역연구 DB를 일원화하여 국가정보자원을 확충함.
- 연구 및 투자진출 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인적자원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함.
- 세계지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세계지역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한 민간분야 지역전문가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CRES Visiting Fellows Program)
 - 해외 학자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한 세계지역 연구역량 강화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 DDA 협상 타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WTO/DDA 단기 연구시리즈, 국민의 DDA 및 경제개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경제개방 시리즈, 사례 중심의 단기 연구보고서 등 발간
- 국제통상법 및 WTO 규범분야 협동연구 추진
- DDA 및 FTA 관련 대정부지원
 -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주요국의 통상정책, 산업정책의 변화,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 및 구제방안을 제시
- KIEP 국제통상연구회 운영
 - 국제통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통상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APEC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하며, 관련 회의에 대한 대정부 지원 및 연구자료 발간 등을 추진함.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ASC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APEC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관련 대정부 지원을 통해 APEC 연구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KOPEC 업무를 관장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계, 정부,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 2011년 APEC 정상 제안 사업 정책 목표 제시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 기본적인 무역 관련 DB 구축을 통해 국제거시모형, CGE 모형, 국제 I-O 모형을 보완하여 정부정책 결정의 기초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관세통계를 구축한 후 이를 정책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화함.
- 또한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효과 계측을 위한 CGE 모형을 운영하고, 미국과 EU에 대한 통상연구 관련 정치경제학적 주요 통계를 구축함.
- 2010년 도입된 동태적 CGE 모형을 기존 FTA 및 DDA 관련 연구에 적용
- 한국의 상품교역 관련 자료 정리
 - 한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혜관세, 관세환급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KIEP 국제거시모형 확장 및 업그레이드

- KIEP 국제거시경제모형을 확장하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고, 지난 모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한 중 일 미의 RW, 5개국 모형을 구성하고, 특히 자산시장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시적 충격 발생 시 4개국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함.
- 기본과제 및 연구자료 등 보고서를 통해 모형의 활용도를 높임.
- 중기적 균형환율 예측과 원/달러 예측을 위한 계량모형을 구축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아시아지역의 싱크탱크 및 학자들이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Earth Institute(EI), 일본 게이오대학 세계안보연구센터(GSRC)와 제휴하여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BPEA) 또는 유럽의 Economic Policy(EP)와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의 주요 경제적 현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주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함.
- 아시아지역의 주요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두 차례 패널을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AEP)*를 연 3회 발간(MIT Press)

해외유관기관 연구 교류

- 주요 경제권역별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함.
- 세계 주요 지역별 대외경제관계 및 경험현안을 분석하고,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권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지역주의와 FTA 여건 분석,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 및 지역연구와 연계한 개발협력 연구 강화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국 간의 경제통합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방향과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다자협력방안 검토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연구회(분과회) 개최 및 정부 요청의 국제회의 지원 등을 위해 대외경제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함. 각 연구회는 20인 이내, 지역연구회 산하 분과는 14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연구회에 1~2명의 간사를 지정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함.
- 대외경제전문가들 간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경제질서 및 경제운영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혹은 협상 동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및 입장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함
-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가 필요한 비공식 국제회의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동아시아연구 네트워크 강화

- 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해외학자를 초청, 연구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동아시아 연구활동의 허브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 국내외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동향정보, 학술문헌정보 및 전문연구정보, 세미나 정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 선별한 후 웹사이트를 통해 확산하고 있음.
- 동아시아 경제협력 협동연구(동북아 연구시리즈로 발간)
- 매년 개최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례 국제세미나,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 등 주요 세미나 결과를 기초로 원내의 연구진의 협동연구 추진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를 위해 소외지역 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 FP(Full Package)와 주요 지역전문가 공동 양성계획인 SP(Special Package)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대와 한국외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 등 5개 국제대학원이 참여하고 있음.
- 특정 지역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교육기관 차원의 지역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 실시
- 세계경제질서 변화를 맞아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며, 우리나라와의 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논문 심사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한·미 연구원은 한·미 양국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워싱턴 외교전문가, 학자들에게 인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한·미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구축(Regional Studies Research Network)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REN형 연구소로 ① 한반도 전문가 양성 ② 정책연구 지원 ③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함.
-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훈련
-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구축

- SAIS-KIEP Global Korea 네트워크 구축
- 북한경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북한경제포럼 확대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과 전략 모색

-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원한 ODA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함.
- 일본과 중국의 ODA 지원전략을 분석하여 개도국과의 경제 및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데 OD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
- 우리나라의 전략적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지역과 국가를 등급별로 분류
- EDCF와 KOICA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방안 수립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추진 지원사업

- 199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북아개발은행의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도출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관련 전문가 국제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다. 연구 지원 사업

정보관리사업

- 연구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Digital Library를 운영하여 개별 연구자의 과제별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소장자료의 온라인 목록을 연동함. 해외 각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경제연구소, 국제경제기구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 『해외 주요기관 자료속보』와 『최근 이슈별 자료속보』를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별 통계 등 지역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전산운영사업

- 지식정보시스템(KINS)을 통해 연구원의 모든 연구진행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축적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영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웹사이트를 구현하고, 도서관리시스템(LAS) 업그레이드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전산 인프라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출판·편집사업

- 정책연구보고서와 주제별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등 현안자료 발간을 통해 세계경제에 관한 심층분석 내용을 제공함. 연구원의 모든 발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학술 DB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연구 정보 확산을 추진.
- 연구성과 홍보 및 정보확산
 - 홈페이지 및 IKIS, 유관기관 학술정보 DB 등재
- 출판자료 배포 및 판매 회원제 운영

대외홍보사업

- 언론기고, 특집기사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KIEP 웹진을 통해 연구성과물 및 연구원 소식을 제공함. “World's Leading Think Tank”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획홍보체계를 정립하여 홍보 및 보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별 유학생 DB를 구축하여 인력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다지고 있음.
- 온라인 홍보 강화
- 전략적 통합 홍보 추진

라. 해외사무소 운영

미 KEI 운영

- 현지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여론주도층의 토론회, 한·미 정책세미나,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술 및 정책 용역사업과 인사교류도 진행하고 있음.
- KEI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효과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경제를 적극 홍보하여 한국 여론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한·미 정책세미나 및 한국경제 설명회, 한·미 합동 학술토론회(Academic Symposium) 등 개최
- 북한 관련 한·미 공조사업 개발
- 미국의 새 정부 출범 후 필요한 정치 경제 관련 프로그램 계획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중국 현지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한국경제 및 정책을 중국에 홍보하기 위해 수시로 「중국경제현안브리핑」을 작성/배포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한중경제포럼을 운영하여 한 중 간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정책에 기여하며, 한 중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관련연구를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 홍보사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사업을 지원함.
- 중국경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POOL 운영
- 한반도 문제 전문가 POOL 운영
-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발족에 맞추어 지방 네트워크 사업 강화

마. 기타

국제세미나

- KIEP-PRI-CASS 회의(The 5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 책임자: 허인 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12
- KIEP-IMF-ADB Conference
 - 책임자: 박복영 연구위원, 안지연 부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12
-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주관
 - 책임자: 박영준 부연구위원, 김흥중 선임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12
- 제9차 KIEP-AMR 세미나
 - 책임자: 박월라 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10
- 제5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 책임자: 이재영 연구위원
 - 기 간: 2011. 5~2011. 10
- 제15차 한·중남미 협력포럼
 - 책임자: 권기수 부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12
- 북한경제의 개방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과제
 - 책임자: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 기 간: 2011. 3~2011. 7
- 한·러 정책협의회: GTI 개발동향과 한 러 협력방안
 - 책임자: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 기 간: 2011. 8~2011. 9
-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례 국제세미나(제7차)
 - 책임자: 정형근 선임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10

- KIEP-국제기구 공동 세미나
 - 책임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 기 간: 2011. 1~2011. 9
- KIEP-동북아경제학회 공동세미나
 - 책임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 기 간: 2011. 7~2011. 12

정책·토론 협의회

-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지의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 주요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KIEP Annual Report

2011년

주요 연구



① 2011년 연구방향

- 국제거시금융 분야는 대외충격으로부터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의 성장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둔.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및 대응과정으로부터 외부충격이 실물 및 금융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였는데, 2011년에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함.
 - 글로벌 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 등 국제금융질서의 개혁 논의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금융 측면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G2 체제가 확고해지고 G20 정례화 등을 통해 글로벌 거버نس가 크게 변화되었는데, 국제금융질서, 국제통상질서, 선진국과 신흥국과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011년에는 세계 경제 및 무역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주의성향의 경기부양책(특히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 조치)과 DDA 타결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을 연구사업의 목표로 설정함.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 경제의 체제 및 질서변화에 대응하여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지역 및 국가에 대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확산 보급에 연구사업의 목표를 둔.
 - 선진국, 중국 및 거대 개도국, 기타 개도국 등 지역별, 권역별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지역을 파악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심층 지역연구 추진
 - 상기 연구결과를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포커스, 중국성별동향 브리핑, 전문가 풀, 각종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부 및 민간에 전달, 확산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남남협력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역내 FTA 및 직접투자관련 연구를 심화하며,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특히 북 중 경제관계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발굴함.

② 기본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기본연구 과제	•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양적 성장과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정부소유, 이자율 통제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업의 미발전 등은 여전히 중국 금융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경쟁력 부족과 정부의 금융개입은 중국이 환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중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시 환율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정한 환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자유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기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의 모의실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한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가 국제적 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 발전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하기보다는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주요 국제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역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달러 의존, 주변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나 미국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ASEAN+3 통화·금융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와 역내 통화의 투자 및 용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첫째,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시사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미국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계 3대 주요 국제통화로서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아시아에서도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역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에서는 먼저 현재 위기해결프로그램 성격으로 운용 중인 CMIM 외에 추가로 위기에방기능을 갖춘다면 동아시아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화로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동아시아의 지역 통화금융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에서 먼저 자본시장 개방 분야는 과거 교역 중심의 한·중 경제협력이 향후 금융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금융부문의 상호 보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금융업 관리·감독의 협력, 양국 은행업계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양국 간 금융업 업무 협력 및 자본시장 개방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시장 국제화 분야는 한·중 간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위안화 공급이 많아지면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더욱 커질 것이다. 위안화 무역결제는 위안화 보유와 운용에 대한 유인이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기여

- 동아시아 통화질서 변화에 따라 한국도 역내 변화에 대응한 시나리오 필요

▶ 연구진

박복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
오승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정승용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영준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 발간정보 : 연구보고서 11-04 / 212쪽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적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 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에서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2010년의 보호무역 수준을 비교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세계 관세율의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10년 보호무역 수준이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수입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고, 보호조치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형별로 보면 그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세계공황을 악화시킨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준다.

정책시사점에서는 먼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기회복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보호주의가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촉발할 수 있으며 세계경기침체도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차별적인 경기회복 방안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경기회복 정책을 국제규범에 합치되게 운영해야 한다.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 정책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정 부문에 대한 국내지원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명료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하며, 해당 정책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허용된 양허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행세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

다음으로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WTO회원국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가 적절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조치에 대한 감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포괄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관세감축 방안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가 절실하다. 넷째, 보호주의의 동결 및 억제에 위한 정치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정책 기여

- 보호주의의 국제적 논의 및 실증 분석을 통해서 무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

▶ 연구진

최낙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연구위원
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위원
박순찬 |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5 / 202쪽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꾸준히 개방화의 길을 걸어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자본 및 외환시장의 규제를 상당 수 완화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인투자자금은 주식투자자와 기타투자 등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국내 금융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금융시장 개방화는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외국인 자본의 유입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외국인 자본 유입은 국내의 부족한 자본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자본의 축적이 이뤄지지 않아서 자본시장의 깊이가 깊지 않다. 따라서 자국의 자본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소득세, 의무예치제, 금융기관 외환포지션 규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적절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행정비용 및 높은 기회비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목적에 맞는 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외국인 자본유입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시장은 선진국, 특히 미국 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라서 큰 폭의 변동을 경험했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의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회수되었다.

국제자본 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생겼다. 신흥국의 자본규제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브라질과 한국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자본의 유입규제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통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대하여 깊이를 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신흥국의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서 적은 수요 혹은 공급의 변화에도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요동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투자자금 유출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확대, 즉 국내자본의 축적을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을 강화시켜 대외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기여

- 자본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외국인 자본유입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

▶ 연구진

허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안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양다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06 / 181쪽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국제통화 구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대안적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유럽의 단일 통화로 출범한 유로화는 10년 이상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해왔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위안화도 달러화에 대한 잠재적 대체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미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복수의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무역결제 통화의 다변화, 외환보유고의 통화 다변화 등을 통해 개별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물부문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각국의 경제적 영향력 변화에 따라 통화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변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제 통화체제의 변화 방향과 가능성 및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국제통화협력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나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외환보유를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지만, 향후에는 지역 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 경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중·일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도 앞장서야 한다. Working group을 만들어 협력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3국 정상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들이 각기 담당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를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 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 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 경제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책 기여

- 국제통화체제의 분석을 통한 한·중·일 통화협력체제 구축과 EACU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연구진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백승관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03 / 299쪽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세계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011년 현재 세계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아래 놓여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거시정책 수단이 사라진 이후에 경기 재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유로지역을 중심으로는 금융위기 중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합이 GDP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충격에 특히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발생 가능한 중기적 대외위험 요소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변화한 대내외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한 대외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기적인 경제 전망과 정책적 대안 수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외경제 변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대 이후 변화하였는가? 둘째,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1990년대에 비해 달라진 2000년대의 대외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 환율, 중국변수 등이 우리나라에 미

치는 영향은 2000년대 들어와 뚜렷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대외환경을 이해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분석한 대외 변수 모두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변동성이 높아진 유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국경제와의 교역관계가 커진 만큼 중국의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심화 가능성이다. 분석한 시나리오 중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세계경제 침체가 전망되었다.

2012년 상반기는 재정위기가 악화되느냐 개선되느냐의 기로가 될 수 있으므로, 유로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결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장기 전망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정부의 경제 주체들은 장기 계획하에 투자와 소비를 결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지 못한 변수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정책 기여

- 대외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과 중기적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험 요인 및 그 영향을 분석

▶ 연구진

이동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박영준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강은정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05 / 140쪽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미 모델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은 저축·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네가지 핵심요소를 영·미 모델과 비교·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단계에 물적·인적·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발전 전략에는 국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첫째,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일본·한국은 높은 투자율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다. 셋째, 일본·대만·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넷째, 대만은 금융규율 확립에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 확립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일본·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중국은 FDI 유치를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균형,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의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동아시아 모델과 영·미 모델의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먼저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불균형을 통해 미국과 여타 나라 사이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국제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G20 체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선진국들이 내수 확대를 통한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중국 등 신흥국들은 과도한 저축보다는 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저축률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총저축률을 좌우하는 가계저축률이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격감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소득 증대를 유발하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고도성장 가능성과 역내 무역·자본 거래의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가 역내 경제협력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분쟁 등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정기적인 민·관 합동연구에 따른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먼저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를 검토·시행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출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출입과 경상수지의 지나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미세조정 개입은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이다. 순수 국내계 은행인 우리은행은 국내 민간자본에 의해 소유·경영되도록 해서 토종은행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은행산업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개선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이 강화되어왔다고는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감독당국이 주목할 분야 중 하나는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이다. 파생상품의 추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이었고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의 투기적 성향을 제한하는 적절한 규제·감독 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정책 기여

-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분석 영·미 모델과 비교하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 및 우리나라에 맞는 발전 모델의 방향성 및 과제 제시

▶ 연구진

조종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박영준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이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양다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08 / 159쪽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하는 FTAAP 창설에 대비하여 역내의 주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FTAAP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성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WCO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과 EU, NAFTA 등을 비롯한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별된다. 반면에 지역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성격을 구분 지을 수 있다.

둘째, APEC의 경제통합 비전과 관련하여 APEC 역내 원산지규정 관련제반 활동을 살펴본 이후 APEC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의 필요성을 찾아보았다.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 발생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APEC에서 진행되는 원산지규정 관련 간소화 작업은 1) 역내 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증 관련 유효기한, 신고서 면제 및 미소기준 적용 현황파악 작업 2)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의 확대 활동으로 대별된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간 연관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조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적 함의로서 첫째, 지역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양자누적에 비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무역창출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미소기준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실질적인 변형의 판단기준으로 변경기준을 채택할 때 미소기준을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회원국간 무역이 분석모형에 따라 6.8~22.4%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원산지규정을 증명하는 방법인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이 무역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기관증명은 회원국 간 무역을 6.3~17.4% 증진시키는 반면에 자율증명이 회원국간 무역을 촉진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APEC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에 대한 정책 시사점으로 첫째, WebTR의 정보 확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TPP를 비롯한 역내 FTAs/RTAs 확산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요인과 비용 상승 요인을 경감시키면서, APEC 경제통합의 상징적인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FTAAP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이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환경 조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도출이 기대되는 행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산지누적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APEC 역내에서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하고 단순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성 증진 및 제도 개선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APEC 능력배양사업 활성화를 통한 원산지증명 조화 및 간소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APEC 산하 협의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능력배양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원산지 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정책 기여

- 역내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특성을 검토
-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발굴하여 정책대안 제시

▶ 연구진

김상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연구위원

박인원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박순찬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임경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6 / 174쪽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정책시사점으로서 첫 번째로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가 높은 중간재 교역 비중 때문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쟁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법·규정·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낮춰야 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도 전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제 국내 시장침투도를 완화시키는 효과와 함께 경쟁 제고를 통한 마크업 하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방화를 고려한 산업별 경쟁도 측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쟁구조를 파악하는 데 해외 부문의 경쟁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며,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립하여야 한다. 개방은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즉 무역자유화가 항상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개방화될수록 경쟁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이용하여 성장해왔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전략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대한 진입과 투자규제가 여전히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 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정책 기여

-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 수립,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 도입,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립을 제안

▶ 연구진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박혜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2 / 162쪽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 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적 제언으로서 첫 번째로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이다. 중간재의 구조적인 수입의존도와 그 증가양상은 수출에서 거두는 이익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무역수지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으면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악화는 물론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노력 못지 않게 산업 전반에 중간재로 많이 투입되는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다. 한국은 자본과 중상기술(middle-high skill) 부존도가 풍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중간재의 비교우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 전략에 대한 제언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EU의 FTA를 발효시켰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중간재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일본 등과는 아직 협상 중이거나 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협상에 앞서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이다. 현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국가들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재 교역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분할로 인해 오히려 국내 생산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 감축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따라서 중간재 교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은 효과적이며 부담감이 덜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중간재 교역의 무역장벽 감축은 생산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간재 교역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 수립도 고려할 수 있다.

정책 기여

-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

▶ 연구진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강준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위원
김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위원
현혜정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3 / 275쪽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 ·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 칠레, 한 · 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 ·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GSP 도입과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활용하여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 부문 개방에 따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비롯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면적 GSP 실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GSP 도입이 국제통상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GSP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DDA 협상에서의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협상(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개도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GSP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협상전략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GSP 제도의 도입이 다른 국제협상에 일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선언하거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할 수 없다. 협상마다 그 속성과 그룹의 구분 방식이 상이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분야의 협상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포함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여타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기여

-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0-10 / 168쪽

▶ 연구진

조미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위원
김영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강준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 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첫 번째로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 · 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 · 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산업별 특징에 따라 조사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 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 · 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뉘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 ·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 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기술 수준은 운송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 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 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 · 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제별로 과학적 ·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여

-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 ·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연구진

장용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서정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양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4 / 305쪽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 보조금은 오랫동안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 또한 건국 이래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 제도 및 규정,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지역에 제공해 온 각종 무상지원, 금융, 세제 인센티브, 구조조정 지원조치들은 WTO 보조금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무역마찰이 빈번해지면서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개방적이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의 추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관심과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인 주요 선진국의 중국 보조금 관련 대응 사례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장 빈번하게 규제 대상이 된 보조금의 형태와 핵심 쟁점, 당사국들의 대응 논리와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에 의한 WTO 차원의 대중국 보조금 제소와 상계관세 조치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 행태와 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차 한·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정책 기여

-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에 의한 WTO 차원의 대중국 보조금 제소와 상계관세 조치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논리를 검토

▶ 연구진

박월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사덕호드자예브 세르조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나수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위원
여지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위원
마 광 | 중국 국립 절강대학 법과대학 부교수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0 / 239쪽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이 대변해주듯이, 일본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경제의 마지막 보루로까지 평가받았던, 일본 제조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을 접하게 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의 바람직한 제조업 위상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추이를 과연 어떠한 ‘척도’로 평가해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과연 일관성이 있고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나아가 과연 일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부 전자제품 업체도 1990년대 이후 모독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쟁력 약화 현상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신성장 분야 개척을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위상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일 기업간 경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일부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소재 분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신흥국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국내의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직접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도 있다.

셋째,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반 강화는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세계 3위(2010년)이지만, 아직까지 부품·소재 및 기초·원천기술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R&D 지원 시책을 참고하고, 동시에 과거 일본의 다수 연구조합 또는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융합·복합화, 기술개발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3년도부터 대학의 TLO 설치를 시작으로 산관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제도상의 인프라 확충기간이 짧은데다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구축한 산관학 연계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시책을 통해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책기여

- 1990년대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대응

▶ 연구진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이형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김은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8/249쪽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발트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다. 그러나 CIS는 창설 당시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수많은 협정과 조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0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추가적으로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여기에 다른 CIS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CIS권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CIS 국가 전체 GDP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까닭에 향후 한국의 대CIS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동맹 출범 2년째를 맞이한 지금,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CIS 역내 경제통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관세동맹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

대 논의이다. 2010년 한국의 대관세동맹 3개국에 대한 총수출은 약 84억 달러, 수입은 약 103억 달러로 관세동맹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 2.4%이다. 현재까지 이들 3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향후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요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이다. 2010년 CIS 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이 발효된 이후 전반적으로 관세동맹국 내에서 경제적 통제가 적어지고, 현지 생산 공장들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국 관세동맹이 창설되어 단일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동맹국에 대한 현지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이다. WTO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관세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며, 국제규범을 통해 다자무역체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관세동맹 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대관세동맹 국가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이들 시장을 선점하고 상호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이들 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및 수산물 쿼터 확보,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기여

- CIS 역내 경제통합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CIS 역내 관세동맹의 내용과 전망 검토
-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방안과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 및 한국과 관세동맹 간의 FTA 체결 가능성 분석

▶ 연구진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사덕호드자예브 세르쵸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박순찬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황지영 |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6 / 212쪽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이후 주요 통상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EU 시장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FTA는 본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양측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므로, 체결 후 양측의 무역량이 증가하

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 대EU 수출량은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유럽의 경기가 호전되고 FTA에 따른 관세인하 폭이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경우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 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과의 FTA가 단순히 관세철폐가 아닌 규제조정 등 시장통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정책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FTA의 발효로 EU 시장진출을 위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EU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협상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누릴 상대적인 무역특혜 수준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EU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무역과 투자관계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U와의 무역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대EU 통상 이슈의 초점이 국내법규를 비롯, 규제 및 표준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 짐에 따라 국내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외국기업과 제품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또한 일어날 소지가 더 크다.

정책 기여

- 한·EU FTA로 인해 한국과 EU의 무역투자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조망
- FTA가 발효된 이후 한·EU 간의 중요한 통상 이슈는 무엇인지 전망
- EU 시장 진출을 위해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 연구진

강유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이철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오현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0/272쪽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급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 전수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단계인 동북부 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여

-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의 변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 경쟁국들의 협력전략
- 양국간 산업협력 수준을 분석하여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

▶ 연구진

권기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김진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고희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4 / 227쪽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한국의 높은 임금수준에 부담을 느낀 단순제조업들은 저렴한 임금을 찾아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진행된 기업들의 진출 과정과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초기의 단순 진입방식, 즉 현지의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인을 경영진으로 고용하거나 현지 내수를 공략하는 등 다양한 현지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진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개별 기업의 경영실적 자료를 통해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것이다. 이로써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근까지도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 관련법령과 기관을 정비하였으며, ODA를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동남아 저개발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 투자환경개선 패키지를 통하여 본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유도요노 대통령 재선 이후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PPP 도입, 토지수용 관련법 정비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에 의하면 투자환경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

은 재산권 등록, 대출, 채권회수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고, 인도네시아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소 나은 편이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다소 나은 편이지만, 부정부패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세계 평균보다 낮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둘째,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셋째,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넷째,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다섯째,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전략 수립 시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전문인력 확보 및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여

-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을 통해서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과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에 기여

▶ 연구진

김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백유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강대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2 / 187쪽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한·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 장치가 거의 완비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장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 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결론 및 시사점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 주를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편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들 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책 기여

- 주별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연구
- 성장회계모형을 사용하여 인도 주별 장기성장률 추정

▶ 연구진

조충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최윤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송영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5 / 180쪽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프리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으로 국제경제 무대에서 외면당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자원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미개척 시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속도는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 '신식민지'론을 거론하며 견제할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규모 원조 공세 등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자원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은 대륙 전체를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발원조 및 통상협력 확대, 안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 들어 아프리카는 더 이상 '오지의 대륙'이 아니며 세계 주요국 간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진출의 최후발주자로서 진출경험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자금력, 외교 및 문화적 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진출 역량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전략적 또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기업 차원에

서 경쟁국들과의 차별화 방안 또는 협력진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협력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력, 진출경험, 리스크 관리 등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중점협력 국가를 선정,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인근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고유의 경험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되, 아프리카 현지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이다.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금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신용기관이 적극 나서 선진국의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하여 세계은행(WB)·국제금융공사(IFC)·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투자은행(EIB) 등의 다자개발은행(MDB), 국제투자은행(IB) 등과의 협조유지를 통해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 기업들은 오랜 진출 역사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진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사업경험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선진국 기업과의 협력진출은 리스크 분산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우리 업체의 진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정책 기여

- 아프리카에 전략적,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의 전략을 분석, 시사점과 대응책을 모색

▶ 연구진

박영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장
전혜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김성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영문에디터
김민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3 / 401쪽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제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기여

-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

▶ 연구진

정현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위원
이종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위원
홍익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위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21 / 241쪽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

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 기여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를 검토, 신흥 개도국과 국제기구 남남협력 추진 체제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 연구진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권 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위원
박수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위원
이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7 / 245쪽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 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에도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서비스 개방 추세 및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기능적 통합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던 한·중·일 간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한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중국 투자를 서비스산업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역내 개방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산업지원이나 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도적·비제도적인 규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진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우선, 한·중·일 3국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한·중·일 3국 공히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역내 상호직접투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로 한국 및 중국기업들이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시장별로 존재하는 각종 비제도적인 진입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다. 우선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 M&A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수자금 및 컨설팅 기능과 관련한 정부지원 및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불균형 등에서 오는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협회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구축, 중국 및 일본신용정보회사 간의 협정 체결, 일본·중국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업 컨설팅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높은 시장개방도를 고려할 때 중국 및 일본의 국내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각 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국내 유통시장이 보다 세분화·전문화될 경우 향후 외국기업의 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소매업체의 역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외국자본 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투기성 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자본의 기업인수능력 제고방안(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및 국내자본의 증시유입 확대 등을 통해 주가상승,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본이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여

- 한·중·일 3국의 서비스 산업 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

▶ 연구진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윤미경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방호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나승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19/275쪽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얇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에

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정책 기여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계열모형의 설정과 추정을 통해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을 계측
- 계측된 변동성 결과에 기초하여 어떠한 요인이 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패널모형과 연립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

▶ 연구진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이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김한호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09 / 275쪽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설립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녹색산업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석유, 천연가스는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역시 중요하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보호주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녹색보호주의가 대두된 원인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대응 때문이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작된 국내 환경규제 증가가 녹색보호주의 대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각국은 기후변화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녹색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및 녹색보호주의가 국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가 적극 유도되어야 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로 대표되는 녹색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편중 해소, 기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아 생산유발은 물론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추진 및 민간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루어진 사회의 모습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녹색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녹색산업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하며 해외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도 미미한 실정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기업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하여야 한다.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의 심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자국의 녹색산업 지원을 넘어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산업 수출을 위한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가 필요하다.



정책 기여

-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을 분석, 정책시사점 도출

▶ 연구진

고희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준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연구위원
오민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이보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연구원

▶ 발간정보 연구보고서 11-01 / 217쪽

③ 수시연구과제

● 연구자료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11-18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11-30	한·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11-39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Working Paper

11-01	Empirical Tests of Comparative Advantage: Factor Proportions, Technology, and Geography
11-02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11-03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11-04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Financial Contribution to One Entity, Benefit to Another
11-05	Ca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Lessen Capital Volatility in a Country with 'Original Sin'?
11-06	Regional Difference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Pro-Poor Growth: An Application to Rural Ethiopia
11-07	A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11-08	Can English Proficiency Boost International Tradein Services?
11-09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

11-10	Real Convergence and European integration: what factors make the difference in growth at regional level?
11-11	Measuring Arbitrage Costs from Relative Prices: Implications for the PPP Puzzle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기발호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	-----------------------------

● 지역연구시리즈

11-01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	---

● Conference Proceedings 세미나자료모음

11-01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11-02	2010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11-03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11-04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11-05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I: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11-01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11-02	이집트의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천연 가스, 인프라
11-03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농가공업, 인프라산업, 직물·의류산업
11-04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11-05	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11-06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건설

● 단행본

10-01	제4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	-----------------------------------

연구자료

●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연구자료 11-01 / 110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과 BOP 비즈니스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중합개발계획(CADP),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인도네시아 경제회랑(EDC)과 같은 아시아 광역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저자전략을 강화하는 등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본정보와 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정리·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본의 전략 변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김규판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이형근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연구자료 11-02 / 106쪽

태양광산업은 차세대 대체에너지원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우리와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은 2007년부터 세계 최대의 태양광산업기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태양광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중국 태양광 산업 현황 및 주요 정책을 종합 정리하고, 중국 내 대표적인 태양광산업기지 중 하나인 장쑤성(江蘇省)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쑤성 태양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특징, 주요 정책, 클러스터 조성 실태 등을 분석하고, 태양광업체의 성장결정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우리 정부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노수연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자료 11-03 / 115쪽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 산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프로그램(CAIP)과 공동체 TAA(Community TAA) 등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사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연구진 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지통상팀 전문연구원
김균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11-04 / 98쪽

최근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LED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미래의 빛으로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LED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는데, 이에 힘입어 중국 LED 산업 생산액과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LED 산업을 미래의 전략적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LED 산업 현황과 더불어 징진지(京津冀)라는 특정 지역의 LED 산업 현황과 문제점, 특징, 육성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타 지역과의 비교분석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국기업의 징진지 LED 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연구진 김부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연구자료 11-05 / ODA 정책연구 11-01 / 98쪽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원조 비율을 0.25%,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적 방법은 최근 미시개발경제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원조 효과 측정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조 담당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의 기본 논리에서부터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연구진 손기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김민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박수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연구자료 11-06 / ODA 정책연구 11-02 / 145쪽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원조정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및 국외에서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드러난 ODA에 대한 국민태도 및 인식은 주요 정책과제 및 향후 ODA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체계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연구진 권 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박수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연구자료 11-07 / ODA 정책연구 11-03 / 101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자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하고 빈곤과 저개발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자원 확대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DAC 신규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도국 내 재원 조성을 위한 조세 개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무역을 통한 국제 재원의 유입과 무역 관련 지원 확대,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 ▶ 연구진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연구자료 11-08 / ODA 정책연구 11-04 / 109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자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하고 빈곤과 저개발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자원 확대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DAC 신규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도국 내 재원 조성을 위한 조세 개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무역을 통한 국제 재원의 유입과 무역 관련 지원 확대,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 ▶ 연구진 정지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박수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임소영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후변화대응실 연구관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연구자료 11-09 / ODA 정책연구 11-05 / 166쪽

최근 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추진과제를 모색하였다.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고, 유형별 특징과 원조효과성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별 협력전략(CPS)에 다부문적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 강화, 지원수단의 다원화와 위험관리 메커니즘 구축, 민간제안형 PPP 확대를 제안하였다.

▶ 연구진 정지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연구자료 11-10 / ODA 기초연구 11-01 / 293쪽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기본철학을 소개하고,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의 ODA 현황과 협력방향,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일관성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연구진 김종일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황원규 |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윤미경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김낙년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연구자료 11-11 / ODA 기초연구 11-02 / 211쪽

본 연구는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AfT)의 국제적 현황과 핵심이슈를 소개하고 AfT를 통한 무역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과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로 되는 제반 정책을 검토하였다.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CTAD, UNDP,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

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AfT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내용 중 가장 중요한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를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강인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철 |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진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연구자료 11-12 / 109쪽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3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사무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초국가적 권한을 위임 받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ASEAN 사무국이나 APEC 사무국보다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한·중·일 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설정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연구진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방호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자료 11-13 / ODA 기초연구 11-03 / 109쪽

향후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AfT)가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는 AfT와 관련한 정책체계의 확립이다. 현재 AfT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들은 대부분 AfT를 어떠한 형태로든 전반적 원조체계안에 주류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각국이 AfT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원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고민의 결과인 것이다. 전반적 원조체계하에서 AfT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fT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 또한 AfT 정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면 AfT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므로 효과성 있는 AfT 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에 있어서 무역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개도국의 모든 무역 문제를 지원할 수는 없다. 한국이 지향하는 원조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도 AfT 정책체계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 연구진 한홍렬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호생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시욱 |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1-14 / ODA 기초연구 11-04 / 112쪽

이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서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CSR과 PPP 범위의 재검토, 우리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파악, 이미 개발된 사회공헌 규범모형의 정리를 통해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의 세 측면에서 민관 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연구진 노한균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연구자료 11-15 / ODA 기초연구 11-05 / 115쪽

국제환경의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지역별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력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제도 및 정책 운영, 복·융합 및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연계형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연구진 김철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1-16 / 82쪽

중앙아시아 3국은 경제특구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산업 부문에서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 지정과 운영이 이러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추가로 경제특구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구 설립과 주요 유치산업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중동, 러시아 및 다른 CIS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므로 이 지역을 통한 인근 국가들로의 수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연구진 조영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연구자료 11-17 / 100쪽

한·중·일 3국은 대(對)캄보디아 주요 ODA 공여국이다. 한국은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으나 ODA 자금의 구조나 지원분야의 분포 등 ODA 내용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을 각국의 캄보디아 경제교류와 비교하고 ODA가 캄보디아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분야에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의 ODA가 향후 일본·중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연구진 이창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방호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연구자료 11-18 / 110쪽

한·중 수교 20년 만에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현황을 지역별·업종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장쑤성(江蘇省)은 노동, 자본,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이 고르게 발전한 경제의 중심지이자, 산동성 다음으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진출한 중요한 투자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장쑤성 투자 현황, 투자입지로서 장쑤성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에서 말하는 직접투자의 유인(誘因)인 OLI-advantage가 장쑤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업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노수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곽주영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국제경영 전공 조교수

●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료 11-19 / 117쪽

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역시 최근 들어 FTA 환경 분야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협정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협정문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연구자료 11-20 / 317쪽

장기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수출성장의 주역은 가공무역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급감,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광둥성 수출가공기업들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광둥성 소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전략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홍익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종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김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찬우 | 일본 도쿄국제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강사
임수호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연구자료 11-21 / 82쪽

미국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 수출확대,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있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3국 수출시장에서 미국 중소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진행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증가는 물론 대미수출에 대한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이 수출확대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통상마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진 고희채 | 대외경제연구소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위원
오민아 | 대외경제연구소 국제경제실 북미대양주팀 전문위원
이보람 | 대외경제연구소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연구원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11-22 / 125쪽

최근 중국기업의 공격적인 해외투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국기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의 경우 중국 측의 경험 부족과 무리한 M&A로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 모두 경영성과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 사례로 알카텔을 인수한 TCL, 한국기업인 쌍용차와 하이디스를 각각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업종의 유수 기업이지만,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무시하고 대형 M&A를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한국의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산다는

상대적으로 M&A 규모가 작았고, 지재권 확보뿐만 아니라 피인수기업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산다의 사례는 무리한 대형 M&A보다는 모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수준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구진 박월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최의현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부교수

●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연구자료 11-23 / 110쪽

최근 몇 년간 녹색산업의 부상, 특히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 이후 희토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는 희토류 전쟁에 빠졌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최근 들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희토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일본, 미국 등 주요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현황과 규제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한국기업 및 중국 로컬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김부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오종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연구자료 11-24 / 95쪽

장기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수출성장의 주역은 가공무역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급감,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광둥성 수출가공기업들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광둥성 소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이혁구 |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전공 조교수

●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1-25 / 94쪽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최근 최저임금, 토지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진출과 기업이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긴밀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산업체인이 형성되고 있는 산둥성 내 4개 연해지역, 즉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정책, 임금·토지 같은 생산비용, 투자우대정책 등 다양한 투자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진출 유망한 업종을 제시

하고, 아울러 현지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진 이상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연구자료 11-26 / 119쪽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 연해지역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green field형 투자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본 연구는 비용절감 및 수출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기진 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부 내륙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연해 3개 도시와 수출환경이 양호한 중부 5개 도시 간 기업이 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추산하고 중부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이전전략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 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연구자료 11-27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 266쪽

이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주요 정책, 성과, 문제점, 과제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도 경제를 전망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있다. 분석 결과 경제개혁이후 GDP, 대외무역, FDI 등에서 현격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자동차, 전자, 철강과 같은 개별 산업도 급성장했다.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계층 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고 인프라 확충, 제2녹색혁명과 같은 해결해야 될 향후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과제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인도경제는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의 세대가 이끌어갈 인도 사회를 대비하여 對인도 진출 전략과 정부 간 협력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김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임정성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아시아팀장
손승호 |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위원

●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연구자료 11-28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 214쪽

이 연구는 지역연구가 소홀한 남아시아 3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비교 분석하여, 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분석대상 3개국 중에서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투자유형 및 형태별, 생산 및 판매 형태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파키스탄 및 SAARC와의 FTA 추진,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 환경 정보 수집 및 제

공, 중소기업지원 방안 마련, 지속적인 남아시아 지역 연구 추진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이순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통상학부 조교수
이영일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연구자료 11-29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 265쪽

이 연구는 한국과 인도에서의 상호 이미지를 파악, 비교 분석하여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양자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 정책수립의 기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의 상호 인지도와 이해는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양국간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간 지원 강화, 문화교류 강화 및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 한·인도 CEPA를 활용한 교류확대 등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진 조충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은기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회학 교수
박 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원봉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유성용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혜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 한·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연구자료 11-30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 188쪽

이 연구는 인도의 그린에너지 산업 현황, 특히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개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면서 한국과 인도 양국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태양광과 인도의 풍력 타워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는 한국의 하드웨어 역량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의 교류가 중요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망분야별 구체적 시장 분석과 대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한·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 김현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상민 |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연구본부 신재생에너지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찬국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연구자료 11-3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 187쪽

우리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수익 변동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하나의 방편으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쳐져 있는 신흥시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의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인도의 금융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은행, 증권, 보험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고 있다.

- ▶ 연구진 이 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정무섭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서대교 |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연구자료 11-3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 184쪽

아세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에 속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와 합의라는 대원칙 속에서도 아세안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와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이 적용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인 '합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연구진 강대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박나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유현석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중 |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동남아학과 Senior Lecturer
이동윤 |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1-33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 364쪽

최근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적 및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연구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내부와 외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정치 및 외교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변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의 정치구조 및 정치엘리트 리더십의 특징 그리고 국가목표 및 정책방향과 대외관계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 연구진 조홍국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윤진표 |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및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역임
이한우 |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최경희 |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동업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연구자료 11-34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 196쪽

메콩지역의 개발협력 사업은 1950년대 중반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지원 하에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본격적인 지원하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보다 가속화되었다. 또한 메콩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지역협력체가 등장하였고, 이들도 메콩지역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이 메콩지역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연구진 김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장
신민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김홍구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조영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요한 | 수파노봉대학교 한국협력센터 소장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1-35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 259쪽

이슬람은 동양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가 경제 구조와 경제 운용,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밑바탕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지역협력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 연구진 강대창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박나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김형준 | 한국동남아시아학회 편집위원
홍석준 |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원순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손승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아시아팀장

●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연구자료 11-36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 244쪽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개발수요를 평가하고 분야 선정원칙을 적용하여 국별협력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인 중점 협력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차 중점분야로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분야를 선정하였다. 2차 중점분야로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비에너지)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 ▶ 연구진 이호생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철 |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한홍렬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연구자료 11-37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 203쪽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정치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불교와 전근대적 권력 개념이 독립 이후 경제정책과 정책결정 과정에 적용되면서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저해되었고 소수민족 문제 역시 국민갈등을 야기하였다. 반면 불교를 위시한 미얀마의 제도종교들은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수도원학교 같은 제도적 기반을 통해 인적자원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편 미얀마 신정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아시아 복귀 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미국 등 서방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냈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지속된다면 예상외로 빠르게 경제자유화와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연구진 오윤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강대창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경제분석관
김유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박나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재현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정교수
우교래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방문교수

●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연구자료 11-38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 321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이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 또는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근본 문제인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건설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 지역의 현존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선 문제, 이슬람 요인, 강대국의 전략과 지역안보, 다자안보협력기구 및 철도 인프라 등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통합과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중중앙아시아 협력전략 수립은 물론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 관리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 연구진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장
김석환 | 주성대학 부총장, 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박정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박병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장, 기획부장, 現 책임연구원

● 한·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 11-39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 335쪽

이 보고서는 1992년 한-중앙아시아 수교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정상방문은 17차례나 진행되었으며 민간차원의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또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민족의 후예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 ▶ 연구진 윤성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김안국 | 직업능력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김일겸 | 강남대학교 카자흐스탄학과 교수
성동기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홍미희 |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이시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연구자료 11-40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 215쪽

본 연구에서는 외국 기업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방식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점차 서비스 부문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외국 기업에 대해 투자가 제한되었던 이 부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은행, 보험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변동에 따라 외국기업의 노무 관리가 점차로 서구적이며, 보다 체계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도 현재보다는 점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외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회의 변동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투자국에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 연구진 조영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주진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강명구 |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연구위원
김영식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오영일 |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준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연구자료 11-4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 204쪽

최근 국제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리는 몽골에 대한 광물자원 개발 진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 정책과 더불어 외국 기업의 광물부문 진출 현황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 개발의 연계,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광물가공 공장 설립과 연계한 진출,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연구진 이재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장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윤익중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장
이시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소눔곰보 아비르메드 | 몽골국립대학교 지리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Working Papers

● Empirical Tests of Comparative Advantage: Factor Proportions, Technology, and Geography

WP 11-01 / 35쪽

본 논문은 핵서·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은행, UN의 거시·무역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세 가지 무역모형 중에서 핵서·오린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력모형과 리카도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유의한 결과에서 부존자원 및 기술격차의 부호가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리, 국경, 언어, 식민지, FTA 등 중력모형의 변수들이 무역의 흐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모형의 설명력은 산업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요소의 파라미터 추정 부호는 자원집약적 부문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기술격차도 산업별 분석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선진국, 유럽 국가, 중미 국가에서 식민지 더미변수의 부호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 ▶ 연구진 최낙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연구위원

●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WP 11-02 / 41쪽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과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 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

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연구진 장용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WP 11-03 / 36쪽

본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채무에 관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채무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변수가 국내채무 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채무 비율 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채무 비율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 들은 서로 다른 국내채무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 없이는 국가간 국내채무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연구진 박복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
송원호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Financial Contribution to One Entity, Benefit to Another

WP 11-04 / 53쪽

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 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에서 제소된 몇몇 사건에서는 중간재보조금과 국유기업보조금의 전파(pass-through) 문제에 대한 상세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 논문은 관련 규정과 판결을 검토하며, 간접보조금에 관한 도하라운드 제안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 연구진 사티흐드자예브 세르조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 Ca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Lessen Capital Volatility in a Country with 'Original Sin'?

WP 11-05 / 45쪽

지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는냐의 여부, 즉 소위 '원죄'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본자유화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죄'에서 자유로운 그룹에서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죄'를 가진 그룹에서는 자본변동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질의 제도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가 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보다는 통화의 국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 연구진 박복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
안지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 Regional Difference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Pro-Poor Growth: An Application to Rural Ethiopia

WP 11-06 / 74쪽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역별 이질성의 존재를 무시한 상태에서 성장, 불평등, 그리고 빈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생산기술과 기후의 차이에 근거해서 세 지역(highland, hoe, enset)으로 나누어 성장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지역별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인 후에, 의사고정효과 프로빗 모형(Pseudo-fixed effect Probit model)을 추정하여 세 지역의 빈곤결정인자가 다를 것을 보였다. 빈곤한 가구는 자산 증가, 또는 그 자산의 수익률 증가가 발생하여 행복감(well-being)의 개선이 기대될 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분해(counterfactual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빈곤을 줄이는 성장(Pro-poor growth)을 가구가 보유한 관찰 가능한 자산량의 변화와 그 자산의 생산성 변화로 분해하였다. 호(hoe) 지역에서는 생산성의 변화가 빈곤을 줄이는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두 지역(highland 지역과 enset 지역)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의 성격 또한 지역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장이 호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분포를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두 지역에서

는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의미에서 빈곤을 줄이는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성의 변화가 가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빈곤한 가구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보급되는 생산기술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해 각 수원지역의 환경에 기초해서 검증한 후, 그 지식과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를 건립하여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나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보급할 때, 이 같은 지식과 기술보급이 빈곤을 줄이는 성장 전략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진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부연구위원

●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WP 11-07 / 51쪽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재정(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성된 5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 회원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연구진 박영준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동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부연구위원

● Can English Proficiency Boost International Tradein Services?

WP 11-08 / 33쪽

최근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이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능력이 서비스 교역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nderson and von Wincoop(2003, 2004)의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이들 국가들의 세부 서비스 업종과 전체 서비스 교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국의 영어사용 능력은 서비스 교역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신, 금융, 상업, 보험 및 사업 서비스 등 대인업무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어나 독어는 서비스교역 증진에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자국의 서비스 교역증진을 위해 영어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연구진 이경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위원

●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

WP 11-09 / 45쪽

본 연구는 국경간 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의 효과를 무역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Brander and Spencer(1985)의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틀을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경간 탄소조정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가격 등 국내생산자가 직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부담을 수입자에게 지우는 정책을 의미한다. 2단계 호혜적 시장(reciprocal market) 모형을 사용하여, 먼저 1단계에서 각 정부가 자국의 탄소세율을 결정한다. 이때 상대국이 정한 탄소세율이 높을 경우 자국의 수출업자는 그 차이만큼 국경간 탄소조정세가 부과되고, 자국의 탄소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그 차이만큼 국경간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게 된다. 2단계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탄소세율과 국경간 탄소조정에서 내수공급량 및 수출량을 결정한다. 분석 결과, 국경간 탄소조정이 도입되면 자국 탄소세율이 높은 국가의 한계탄소저감효과가 탄소세율이 낮은 국가보다 크게 되는 등, 국내 탄소세율의 글로벌 차원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자국 탄소세율과 상대국 탄소세율의 전략적 관계는 경쟁의 형태(수량경쟁인지 가격경쟁인지)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탄소세율을 상대국과 비교하는 기후변화정책 리더십에 의존함을 보이고 있다.

▶ 연구진 서정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 Real Convergence and European integration: what factors make the difference in growth at regional level?

WP 11-10 / 44쪽

EU는 출범 초기부터 역내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각 회원국 간 소득수준 수렴(real convergence)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역간 수렴이 이루어졌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수렴 현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렴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5~2007년 사이 EU 지역을 1,300여개 지역(NUTS-3단위)으로 분류한 후 베타수렴(β -convergence)과 시그마수렴(σ -convergence)으로 구분하여 수렴현상을 파악한다. 또한 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수렴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조사결과 국가 간에는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이성(divergence)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유럽 국가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결국 EU 전체에서 국가간, 지역간 소득수준 수렴현상이 나타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이 집중된 지역이 높은 성장을 거듭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며, 낙후지역은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EU에 국한된 연구이나, 동아시아 통합은 물론 국내 FTA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이룰 경우 후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지역은 후생증가 효과로부터 소외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기반을 둔 지역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와 별도로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진 강유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 Measuring Arbitrage Costs from Relative Prices: Implications for the PPP Puzzle

WP 11-11 / 32쪽

최근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이 영어를 사내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사용 능력이 서비스 교역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Anderson and von Wincoop(2003, 2004)의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의 영어사용 능력이 이들 국가들의 세부 서비스 업종과 전체 서비스 교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국의 영어사용 능력은 서비스 교역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신, 금융, 상업, 보험 및 사업 서비스 등 대인업무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어나 독어는 서비스교역 증진에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자국의 서비스 교역증진을 위해 영어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연구진 허 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장
이인구 |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 66쪽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 연구진 성한경 | 국민대학교 국제통상과 교수
김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연구시리즈 11-01 / 93쪽

우리나라는 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술력을 가진 서방 선진국이나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준 중국에 비하면 경쟁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에너지자원 부국과 같이 에너지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 이외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하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이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 산업과 태양광 전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산업으로 나뉘는데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전지, 폴리실리콘 등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에 유리하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금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된다. 관련 기업은 수직계열화, 대형화(1GW 이상 생산능력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원가 절감 및 신흥시장 확보)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자원(일사량)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러시아 및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최고 수준으로 중동 지역과 비교할 때도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매우 풍부한 편에 속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 수출 정책과 주변국의 전력 수요, 터키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태양에너지 전력 수요는 태양열 발전 산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값싼 전력 요금과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국내 인구의 약 73%)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발전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는 데 그치고 있어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을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은 상황이다. 풍부한 가스자원 덕택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전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산업다변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낮은 전력요금은 폴리실리콘 제조와 같은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도 태양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의 공급 부족 전망도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광 산업 개발 가능성을 밝게 해준다.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고도의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

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산업계, 특히 태양광 산업계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낮은 전력요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과 주변국(터키, EU 등)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태양열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150MW급 소규모 하이브리드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를 협력국으로 하여 순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통한 터키, EU로의 태양열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태양광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폴리실리콘 산업(6,000~7,000톤급 생산 규모)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중기로는 소규모 분산형 전력수요(2~4kW급)가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터키, EU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 등을 포함)에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전력 수출을 위한 터키로의 고압직류송전망 건설에 협력하며 단기적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차관(150MW급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4억 4,000만 달러, 6,000~7,000톤급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5~6억 달러)을 제공하여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를 개선하려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을 녹색성장의 축으로 삼으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참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 주진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전문연구원

Conference Proceedings

●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CP 11-01 / 181쪽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몽골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민족주의에 따른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에 발간한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연구진 이창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 2010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CP 11-02 / 301쪽

세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연구진 김양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선임연구위원

●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CP 11-03 / 266쪽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공동 주관한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발전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굴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長江) 삼각주, 주강(珠江) 삼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 4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우한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의 발전 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연구진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CP 11-04 / 326쪽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12차 5개년 계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 연구진 채 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장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소장
김부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I: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CP 11-05 / 172쪽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몽골 및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반면 냉전 종식 후 민족주의에 따른 대립으로 인해 지역안보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역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개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에 발간한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연구진 이창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11-01 / 209쪽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아직 한·EU FTA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 연구진 이철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임채익 | KOTRA 소피아 무역관 관장

● 이집트의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천연 가스, 인프라

11-02 / 171쪽

이집트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2010년 기준 우리의 중동 내 제4위의 수출대상국이며 제8위의 수입대상국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집트는 2010년 5.1%의 실질경제성장률과 2,18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2011년 초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집트는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재정 악화, 민주화 혁명에 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민주화 혁명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이집트 경제의 큰 축이었던 관광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정책 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집트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떨어졌다.

이집트는 농업, 광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업¹⁾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풍부한 나일강 유량을 바탕으로 일찍이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최근까지도 전체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국가 GDP의 16.1%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2월에 걸친 민주화 혁명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 과도정부 체제하에서 이집트의 경제정책 방향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으로, 2012년 신정부 구성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발표 및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진 윤서영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김효근 I KOTRA 카이로 무역관 과장

●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농가공업, 인프라산업, 식물·의류산업

11-03 / 154쪽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구대국 에티오피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이행으로 두 자릿수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우호적인 농업환경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인해 경제규모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의 40%가 하루 1.25달러 미만(구매력 기준)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해 있어 빈곤층 해결이 에티오피아 경제성장의 주된 과제이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감소 및 국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중장기 개발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1/02년 시작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SDPRP)과 2005/06년 시작한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SDEP)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2010/11년부터는 성장과 구조변환계획(GTP)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에 힘입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및 기업과의 경제·산업·개발 협력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는 에티오피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투자대상으로서 에티오피아 경제가 지니는 장점으로서는 개발수요 풍부, 높은 경제성장률, 인적·물적 부존자원 풍부,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 유리한 미국·유럽시장 접근성,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우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소원한 경제협력관계, 높은 교역비용(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 자금조달의 어려움, 거시경제 리스크(인플레이션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의 취약점이 투자 및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대에티오피아 투자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개발·산업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고 에티오피아 현지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연구진 김민희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전혜린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이두영 I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관장

●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11-04 / 225쪽

콜롬비아는 중남미 내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고,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의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문화, 사회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의 무역 대상은 미국과 유럽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콜롬비아 정부는 신시장을 개척하여 무역 상대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에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나, 이 상품 중 많은 수가 양국 간에는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 간에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콜롬비아와 한국은 현재 FTA를 협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이다.

이렇듯 콜롬비아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KOTRA,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KOTR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한 산업 현황과 현실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연구진 권기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황현정 | KOTRA 보고타 KBC 과장

● 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11-05 / 189쪽

2000년대 들어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수출입 호조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베트남 경제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2008년 이후 베트남 경제는 높은 물가상승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최대 국영조선사인 비나신(VINASHIN)의 채무위기 등의 원인으로 위기설에 시달렸다. 베트남 경제위기설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여파로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2011년 1월 개최된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는 경제성장의 속도 못지않은 경제안정중시정책 추진, 세계경제에의 참여 확대, 공업화 · 근대화 · 가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채택하였다.

격변과 위기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상대적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베트남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내부 악재로 2008년에는 6.3%, 2009년에는 5.3%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6.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09년에 11.4% 감소하였던 교역 규모도 2010년에는 22.5% 증가하여 1,5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의 한 축인 FDI(실투자 기준) 역시 2008년 153억 달러에서 2009년 100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11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정치 · 사회적 안정 지속, 풍부한 천연 및 인적자원 보유, FDI 급증 등을 배경으로 신흥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 해외직접투자(ODI),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재개 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였고, 증가율 또한 매년 20~30%로 높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의 5대 ODI 대상지(2011년 6월 및 실투자 기준)이자 최대 ODA 지원대상국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선 베트남의 유망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대(對)베트남 경제협력 확대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둘째 목적은 최근 차이나리스크(China Risk)가 증가하는 가운데 베트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 ▶ 연구진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권경덕 | KOTRA 하노이 KBC 차장

●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건설

11-06 / 205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도 높아져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높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니켈, 동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도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할 만큼 풍부하다. 풍부한 성장잠재력과 정치 ·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이머징마켓으로 부상하자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 투자, 공적개발원조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최대 지원대상국이기도 하다. 더불어 양국은 2011년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를 유망 산업 위주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최근 차이나리스크(China Risk)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1년 들어 특사파견을 통해 자국의 종합적인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인 IEDCs에 한국의 협력과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전폭적인 협력과 참여를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소개하기 위함이다. 넷째, 이 연구는 KIEP의 지역연구 전문성과 KOTRA 현지 한국비즈니스센터(KBC: Korea Business Center)의 살아 있는 현장감과 최신 정보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 연구진 이재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이장희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차장

단행본

● 제4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199쪽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개도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4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5편의 논문 당선작 모음집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④ 현안연구과제

● 오늘의 세계경제

목 록	저 자
1 2011년 신년사설을 통해 본 북한경제 전망	홍익표
2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정형곤 외 1인
3 2011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지역경제	세계지역연구센터
4 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강유덕
5 이집트발(發) 반정부·민주화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과 영향 평가	박철형
6 최근 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 시사점	권 율 외 1인
7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규판 외 3인
8 일본의 지진사태로 본 자연재해와 거시경제	허 인 외 3인
9 일본 대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필수 외 4인
10 중국 인플레이션의 우리나라 전이 가능성과 시사점	박영준 외 2인
11 201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이승신 외 2인
1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나타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	홍익표
13 「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장용준 외 2인
14 UN 최빈개도국 회의의 개최배경과 대응과제	권율 외 1인
15 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성한경 외 6인
16 2011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특징	윤덕룡 외 1인
17 Impact of Japan's Earthquake on East Asia's Production Network	최필수 외 4인
18 The Prospect and Transmission Dynamics of China's Inflation to Korea	박영준 외 2인
19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정형곤 외 1인
20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 전망	조명철 외 1인
21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권 율 외 1인
22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조미진 외 1인
23 DDA, 12월 패키지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서진교 외 1인

24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피해복구 현황과 시사점	이형근 외 1인
25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권기수 외 1인
26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평가	안지연 외 2인
27	세계경제 위험요인 평가와 전망	이동은 외 3인
28	미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	허 인 외 2인
29	주요국의 리비아 사태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한바란 외 7인
30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 의의와 시사점	서진교 외 1인
31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요인 비교 및 시사점	허 인 외 1인
32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세르쥬드 외 1인
33	자본이동 변동성의 원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박복영 외 1인
34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 교역부문의 성과와 과제	이 웅 외 2인
35	한·일, 한·중 통화 스왑 확대와 그 시사점	윤덕룡 외 1인
36	Two Years 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Trade Sector of Korea-India CEPA	이 웅 외 2인
37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재영 외 6인
38	제8차 WTO 각료회의 주요 결정사항과 정책 시사점	서진교 외 1인
39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향후 전망	강유덕 외 1인
40	2012년 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역경제 포커스

목 록		저 자
1	키르기스스탄 총선에 따른 연립정권 구성 결과와 향후 전망	주진홍
2	미·중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나수엽 외 1인
3	중국 「제2차 전국 R&D 자원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최필수 외 1인
4	인도의 최근 애그플레이션 동향과 전망	송영철 외 1인
5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논의의 쟁점과 전망	이보람 외 1인
6	투르크메니스탄의 민간이동통신사 설립 결정과 시사점	주진홍
7	리비아 사태 이후 중동 반정부·민주화 시위의 확산가능성: 주요국별 점검	박철형 외 2인
8	EU의 그린조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조미진 외 1인
9	인도의 2011년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송영철 외 1인
10	중국 내 희토류 산업 관리 강화와 향후 전망	오종혁 외 1인

11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기회복 전망	오현정 외 1인
12	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박혜리 외 1인
13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선거 결과 평가와 전망	주진홍
14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	강유덕 외 7인
15	최근 독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향후 전망	이현진
16	국제 고유가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황지영
17	포르투갈 구제금융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전망	강유덕 외 1인
18	미·중 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WTO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외 1인
19	미얀마 신정부 출범과 서방(西方)의 제재 변화 가능성	강대창
20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의 평가와 시사점	김영귀 외 1인
21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실태와 중국 재정 상황 평가	최필수
22	캐나다 총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	오민아
23	최근 인도네시아의 중·아세안 FTA 대응과 평가	백유진
24	인도 대외교역 5,000억 달러 돌파 동향과 전망	송영철 외 1인
25	제3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26	유럽 통행자유화 협정 개정 논의 및 전망	오현정
27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최근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장용준 외 2인
28	「중국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박민숙 외 1인
29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	강유덕 외 1인
30	페루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전망	박미숙
31	태국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 향방	강대창 외 1인
32	남수단공화국의 분리·독립 배경 및 전망	김민희 외 1인
33	유럽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와 향후 전망	강유덕 외 1인
34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정책대응	윤성학
35	최근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논의와 전망	강유덕 외 1인
36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최근 개정추진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미진 외 1인
37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박영호
38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	강유덕 외 1인
39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여지나
40	에티오피아의 성장과 구조변환 계획(GTP): 평가 및 전망	곽성일
41	중동 국부펀드 현황과 활용방안	한바란 외 1인

42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법 도입 추진과 시사점	주진홍
43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태윤 외 1인
44	키르기스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	주진홍
45	태국 대홍수의 피해 현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재호
46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정지원 외 1인
47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	김균태 외 1인
48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 논의와 성과	박수경 외 1인
49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프로젝트의 재개와 시사점	주진홍
50	EU의 에너지 인프라 종합계획 추진 현황과 시사점	주진홍

● 북경사무소 브리핑

목 록	
1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화 지수와 기업 사례
2	중국의 소비발전 단계와 12·5 기획 기간의 소비 정책
3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협력과 중국의 FTA 전략
4	12차 5개년 기획 기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
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1: 총 16편 중 제1~2편
6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2: 총 16편 중 제3~4편
7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3: 총 16편 중 제5~6편
8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4: 총 16편 중 제7~8편
9	2011년 중국 경제전망
10	2011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
1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5: 총 16편 중 제9~10편
12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6: 총 16편 중 제11~13편
13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기획강요(초안) 7: 총 16편 중 제14~16편
14	2011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
15	중국 경제운영의 특징과 2015년까지의 경제 발전 전망
16	중국의 금융 운영 형세 분석
17	중국의 인력자원 발전현황과 육성 전략
18	중국 주체기능구 전략의 주요 내용

19	2011년 하반기 중국경제와 물가 분석
20	중국 개인 자산시장의 발전현황과 추세
21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특징과 문제점
22	230년 중국 경제발전과 성장 전망
23	12·5기획 기간 중국 성·시별 지역발전전략
24	2011년 중국경제 분석과 2012년 전망
25	12·5기획 기간 중국 성·시별 보장성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6	중국 지방정부 부채 현황과 전망
27	12·5기획 기간 중국 성·시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방안

●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목 록		저 자
1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1): 쓰촨(四川)성	이상훈 외 1인
2	원저우(温州)시,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정책 시행보류: 주요내용과 전망	최보연 외 1인
3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2): 동북 3성	임민경
4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3): 징진지(京津冀)	김부용 외 1인
5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4): 충칭시(重慶市)	오종혁
6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5): 장강삼각주지역	노수연 외 1인
7	주요 성(省)별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6): 네이멍구 자치구 (內蒙古自治區)	임민경 외 1인
8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7): 중부 6개 성	정지현
9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8): 광둥(廣東)성	정지현
10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9): 산둥(山東)성	이상훈 외 1인
11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	노수연
12	중국의 노동력 부족 현황과 전망: 라오닝성 사례를 중심으로	임민경
13	중국 장강삼각주지역의 외국대학 운영현황과 전망	노수연 외 1인
14	항저우(杭州)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과 대응방향	노수연
15	허난(河南)성 산업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 외 1인
16	중국 서부지역 「청위경제구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종혁
17	중국 중앙국유기업의 대(對)광둥성 투자현황 및 전망	정지현 외 1인
18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전망	김부용

19	광둥성의 호구(戶口)제도 개혁 실험: 점수적립제(積分制)의 도입과 향후 전망	김홍원 외 1인
20	저장성(浙江省) 중소기업의 경영난 실태와 전망	노수연
21	산시(山西省) 석탄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전망	정지현 외 1인
22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육성지역(산둥성, 저장성, 광둥성)의 비교 및 평가	노수연 외 2인
23	중국 동북지역 물류 인프라 건설의 최근 동향: 수륙 연계형 물류 구축	임민경
24	중국의 전력난 원인과 전망: 광둥성 사례를 중심으로	오종혁 외 1인
25	범주장삼각주(泛珠江三角洲) 지역협력 추진 현황과 전망	정지현 외 2인
26	베이징시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 파급영향 및 평가	김부용
27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노수연 외 1인

●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목 록	저 자
1 광둥성 산업지도: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지현 외 1인

⑤ 정기간행물

● 대외경제연구 JEA1

2011년 봄호 제15권 1호 통권 34호	
Trade Liberalization, Economic Growth, Energy Consumption and the Environment: Time Series Evidence from G-20 Economies	Jungho Baek, Hyun Seok Kim
Correlations-Adjusted Export Market Diversification	Jung Joo La
Foreign Exchange Exposures of Korean Firms	Sungbin Cho, Min-Kyu Song
한국 · 중국 · 일본에서 생산량 변동성과 성장	이중하, 황진영

2011년 여름호 제15권 2호 통권 35호	
Investing in Port Infrastructure to Lower Trade Costs in East Asia	Kazutomo Abe, John S. Wilson
Structural Breaks and Long Memory Property in Korean Won Exchange Rates: Adaptive FIGARCH Model	Young Wook Han
The Role of Altruism in Sending and Spending Remittances	Akira Shimada
중력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불균형 현상의 규명	이현훈

2011년 가을호 제15권 3호 통권 36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trategie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Boo-Young Eom
Changes in China's Influence on Korean Exports by Production Phase	Wanjoong Kim
2008년 위기 예측 가능했나?: 신호접근법 분석	박원암
금융시장 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한 대안적 통화정책 분석: 한국의 경우	정용승
실질 원 · 달러 환율의 교역재 · 비교역재 부문 분해와 구매력 평가 가설 검증	류덕현, 고희채

2011년 겨울호 제15권 4호 통권 37호

Special Paper: New Developments in EU's External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Asia-Europe Relations	Cae-One Kim
The Determinants of Korea's Terms of Trade: The Real-Side Approach	Hongshik Lee, Hyuk-Hwang Ki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ntegration of Emerging Stock Markets in Asia	Sang Hoon Kang, Seong-Min Yoon
기술적 비대칭적 국가간 특혜무역협정의 안정적 균형조건 분석	김영한, 김재덕

P H O T O N E W S



▶ KIEP-CSHKMPRD간 MOU 체결식(2011.11.23)



▶ 해외방문학자 세미나(2011.3.24)



▶ 해외방문학자 세미나(2011.6.29)



▶ 중국전문가포럼 제2회 공개토론회(2011.11.18)



▶ 전 직원 조회(2011.5.3)



▶ 상장 수여식(2011.9.14)



▶ 굿월스토어 봉사활동(2011.7.15)



▶ 연찬회(2011.3.4)



▶ 전 직원 조회 및 퇴임식(2011.6.29)



▶ 민방위훈련(2011.3.15)



▶ 전 직원 문장력 강화 교육(2011.6.21)

KIER Annual Report



2012년 연구 계획

2012년 연구방향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탐색하고, 각 위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5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위기의 완전한 극복 혹은 위험요인 잔존 여부에 대한 평가와 위기극복과정에서 교훈 도출
 - 한편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유럽 재정위기, 높은 환율변동성, 외국인채권투자 증가 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연구역량 집중
- ▶ 북미, EU 등 선진권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EU의 재정위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의 원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제시

 - 선진국의 경기동향 분석, 유럽재정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EU의 거버넌스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개혁 평가, 일본의 대중(對中) 협력정책 분석
- ▶ 한·EU FTA 및 한·미 FTA의 발효와 한·중 FTA의 개시 등 FTA의 확산에 대비하여 '개방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연구 추진

 - 또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북한 내 시장화 실태를 기존 체제전 한국의 경험을 통해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추진방안 및 세부과제 등을 분석
- ▶ 신흥지역의 각 지역(혹은 국가)별로 주요 이슈에 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며, 그밖에 '전략지역 심층연구' 등 각종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KIEP 신흥지역연구센터가 국내 신흥지역 연구의 허브 역할 수행
- ▶ 2012년 한국과 세계 주요국에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각종 현안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 수행

 - 2012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 ▶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국별 협력 및 대응 전략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연구 추진

 - 중국(중국권역별 전략 포함), 동남아, 인도, 러시아, CIS,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신흥지역별로 우리나라의 협력방향 및 대응전략 분석
 - 특히 2012년에 한 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20년을 회고하고 향후 한 중 관계의 비전과 협력방향을 제시

1

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 거버넌스의 변화 전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0년 초 그리스 위기사태를 시작으로 촉발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그동안 유로존이 가져온 구조적 취약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됨.

 - 취약한 경제구조 속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는 PIGS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호 연계되어 있는 부채망을 통해 유로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된 바 있음.
 - 재정위기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U는 기존의 경제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 중임.
-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EU의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평가하고, 개혁과정에서의 논의와 정책적 시도, 각국의 입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함.

 - 통화공동체로서 유로지역이 추진해온 개혁을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주도국과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 간의 이견, 정책적 조율을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함.
-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로지역의 해체될 것임을 예견하는바,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유로지역이 존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조치들을 조망해 보고자 함.

● 기대효과

-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통화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과정에 대한 실증적 토대를 제공
- EU 경제 거버넌스의 개혁과정과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유럽 관련 지역학 연구에 기여

▶ 연구책임자 강유덕 부연구위원

2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적 대응: 소비자편익을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무역자유화에 따른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FTA 등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진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 증대의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임.
- 그동안의 무역자유화 경제적 효과 연구가 GDP나 수출입 등 주로 거시 변수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그나마 계량화된 소비자후생도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었다는 점이 그 원인임.
-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관점에서 주요 소비재화를 중심으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 결과를 제시,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무역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연구 수행결과 무역자유화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과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원인과 정책적 처방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수립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
-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무역자유화의 소득 및 소비자 편익에 대한 구체적 자료 획득을 통해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효과 존재 시 그 원인 규명 및 정부의 대책 수립에 기여

▶ 연구책임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0년대 중반 지속적인 유가상승을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러시아는 그동안 비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함.
- 기존 CIS 국가에 집중되었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투자산업도 기존의 석유, 가스, 철강 등 자원부문에서 통신, 제조, 금융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는 자국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갈될 우려가 높은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판단됨.
- 러시아가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 기업들의 다국적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 동기를 살펴보고, 산업별 · 대상 국가별로 투자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 ·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진출전략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러시아의 미래 유망 산업을 점검할 수 있는 학술적 기초자료 제공
-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파악하여 한 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함.

▶ 연구책임자 이재영 연구위원

4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대내외 자본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기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환율변동성 증가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충분치 않아서 경제주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증가.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그 대안과 시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함.
- 각 경제주체별 외환리스크 대응이 특히 금융시장을 통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외환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가의 리스크는 각 경제주체들 중 어느 한 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각 경제주체들 간에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최종대응을 주로 국가가 담당하였으나 시장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함.
- 각 경제주체별로 환율변동영향에 대한 시장을 통한 대응방안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후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거시적 분석을 병행할 것임.

● 기대효과

- 무역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예방책을 제시함으로 경제안정화에 기여
- 한국 환율변동성의 기조적 증가와 이에 대한 영향의 제시로 시장환경 변화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 환율변동 관련 논의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

▶ 연구책임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5

국가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로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재정위기가 발발한 국가 군과 이외의 국가들 간의 국가부채 규모 면에서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함.
- 일본, 미국의 신용등급은 강등되었으나, 이로 인한 재정위기가 발발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이들 국가들보다 GDP 대비 부채규모가 적은 국가들도 위기가 발발함.
- 따라서 부채규모뿐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들과 재정조달 방안 등의 차이가 재정위기 혹은 신용등급 강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국가부채 규모, 거시경제 변수, 재정조달 방법 중 조세를 제외한 국채 행을 기준으로 해외자본의 역할 등이 국가신용, 즉 재정위기, 신용등급 강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기대효과

- 지금까지 부채규모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외국 자본의 국채 투자를 감안한 분석은 없었으므로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시장의 발전방향의 설정에서 외국자본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임.
- 이 외에도 주요국의 부채구조를 분석해 각국의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책임자 허인 연구위원

6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9년 하반기 이후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 등으로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위기의 극복이 기대되던 주요 선진국 경제는 2011년 중반 이후 실물경제의 부진과 재정위기의 악화 등으로 단기적·중기적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함.
- 높은 실업률과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 유럽은 그리스를 비롯한 몇 나라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을 위시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임.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동아시아 등 신흥국 경제도 선진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회복세가 강건하지 못할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부적절한 금융감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감독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수년간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로 침체했던 세계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가 과연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2012년 말의 시점에서 평가하고,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 기대효과

- 2008년 금융위기의 밑바탕에 있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위기 방지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모색함.
-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는지 여부를 2012년 말의 시점에서 평가하고 주요국 경제와 우리 경제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책임자 조종화 선임연구위원

7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 즉 경제위기, 전쟁위기 및 자연재해의 충격은 자산가격 변화와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세계화된 2000년대 이후, 자국 외에 발생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자국 내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대한 사전적 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특히 대규모 외부충격이 국제자본이동 흐름에 영향을 주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자산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대규모 외부충격으로 인해 거시경제가 받는 영향이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전쟁위기 및 자연재해가 자산가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빈도는 낮지만 이들 충격의 발생가능성이 자산가격 결정과 거시경제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 대규모 외부충격과 자산가격변화 및 거시경제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외부충격을 정의하고, 과거 사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반응정도를 재해 종류별로 살펴봄.
- 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규모 외부충격과 국제자본이동수준 및 자산가격변화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 기대효과

- 대규모 외부충격과 자산가격의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정립.
- 경제위기, 전쟁위기, 자연재해별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

▶ 연구책임자 안지연 부연구위원

8

G-2시대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규모(GDP)가 일본을 추월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일본의 대중경제 협력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우리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일·중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국간 외교관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부 경제관계에 관한 분석들도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전략이나 기업 차원의 구체적 협력 패턴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
- 한·일 FTA와 한·중 FTA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일·중 FTA나 한·중·일 FTA는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은 무엇이고, 한·중 FTA를 포함한 우리의 대중 경제 협력 전략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현황을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전략과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나 기업의 대중 경제협력 정책·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범위를 '광의'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여, 일본 정부의 대중 경제지원 및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대중 무역 및 투자활동도 분석대상으로 함.

● 기대효과

- 우리 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 수립 시 일본 사례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전략에도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함.

▶ 연구책임자 김규판 연구위원

9

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II :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교토의정서의 시한인 2012년 이후 국제 기후변화체제는 '칸쿰합의 plus' 수준의 기본적 합의를 근간으로 양자 및 지역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1년 협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토의정서 연장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사안 모두 특별한 모멘텀 없이는 내실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협상에서는 포스트교토체제의 기본 프레임에 대한 합의도출이 현실적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까지 추가적 진전이 예상되는 포스트교토체제의 두 가지 기본요소로 ① 감축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성 메커니즘과 ② 개도국의 적응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메커니즘을 들 수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상전략 및 대응정책은 주로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 왔으나, 지속적인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기후변화협상 전체에서 지원부문의 중요성 증대를 감안했을 때, 감축과 지원 양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감축과 지원(재정 및 기술이전)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메커니즘들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안착될 기후변화체제에서 우리나라의 협상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감축과 지원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기초적 논리를 제시
-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 대안 확보와 국제적으로 유력하게 받아들여질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논거 제공.

▶ 연구책임자 서정민 부연구위원

10

저탄소녹색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과 목적

-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新)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함.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었음.
 -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전략: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 신성장 동력창출: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녹색 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녹색정책 관련 일부 실행조치는 다자무역제도(WTO)와 관련성이 있음.
 - 한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WTO 사무총장이 2010년 6월 무역정책검토품관(TPRB)에서 발표한 세계무역동향(trade developments) 자료의 각국 무역 관련 조치 목록에 언급되어 있음.
 - 녹색정책에 따른 많은 프로젝트는 WTO 규범 중 특히 내국민대우/MFN, 보조금협정, TBT 협정과 관련성이 있음.
 - 현행 DDA에서 논의 중인 무역 환경 부분과 관련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녹색정책 중 무역관련 부분에 있어 다자무역제도 WTO 규범과의 양립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녹색정책 수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녹색정책을 향후 WTO 제도와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법률, 시행규칙 개정 논의 제시 등

▶ 연구책임자 사익호드자에브 세르조드 부연구위원

1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과 목적

- 무역확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무역을 통해 고용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주요국들은 미국 신용등급하락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증대 및 성장동력 회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세계무역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무역'을 증대할 필요성도 높아짐.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증대 및 경제성장의 혜택이 여러 분야 및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의 필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고 부문간 및 계층간 양극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무역의 고용효과 및 부가가치무역에 대한 국제 투입산출표에 따른 분석
- 우리나라의 2012년 핵심 정책목표인 고용확대 등 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연구책임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12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수출, 고용을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과 목적

-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FTA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1년 9월 현재 총 8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중 7건의 FTA가 발효 중임.
-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FTA 추진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중상주의자(mercantilist)적 시각에서 FTA를 통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내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실업률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의 논리적 근거 및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발효 FTA가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 그간 한국의 발효 이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FTA별 또는 부문별로 부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존재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 또한 그간 데이터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업별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음.

● 기대효과

-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 확보.
-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긍정적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문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
- 효과가 미진하거나 부정적인 부문의 경우 FTA 협상 시 보다 민감한 주의를 요하거나 FTA 체결 이후 보완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연구책임자 장용준 부연구위원

13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개방정책과 개발정책의 롤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는데, 특히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함께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들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해왔음.
- 본격적인 개방화에 앞서 개방화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개방이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개방정책과 산업정책은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측면에서 효과분석이 필요함.
- 개방화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R&D 정책의 효과를 신기술 개발과 기술 흡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
-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하에서 개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R&D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개방화와 R&D 정책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략 방안(strategic behavior)을 고려하고 R&D 정책을 기술혁신과 선진기술 흡수로 구분하여 이론모형을 제시함.
-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개방화에 따른 효과적인 R&D정책에 관한 차별화된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선진국의 R&D 정책과 그 효과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책임자 김영귀 부연구위원

14

최빈개도국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빈국은 낙후된 경제구조, 절대적 빈곤, 대외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의 문제로 인해 저개발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인프라, 식량 안보, 환경, 무역, 역량발전 등 최빈국이 처한 주요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20%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원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최빈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조사업 설계, 국가별 지역별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빈국은 미래의 협력 파트너로서 원조뿐 아니라, 정치 경제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최빈국 중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함.

● 기대효과

- 최빈개도국의 빈곤현황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빈곤과 개발이론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쟁점 분석.
- 최빈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 및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최빈국에 대한 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함.
- 기후변화, 무역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의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 수립

▶ 연구책임자 권 올 연구위원

15

한·중·일 경제협의회체 구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중·일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고, 한·중·일 FTA를 비롯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 채널을 체계화할 수 있는 ‘한·중·일 경제협의회체’ 설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간 교역 및 투자 차원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주요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환경, 금융, 교통·물류, 관광 및 문화 등에서의 부문별 협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함.
- 본 연구는 3국간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업계, 학계 및 사회단체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관련 대화 채널을 점검하고, 그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대화 채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이들 대화채널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간 비교도 이루어질 것임.
-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3국간 경제협력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대화 채널을 지적하고자 함.
- 그리고 본 연구는 3국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 채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일 경제협의회체’ 설립 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 채널 실태 파악 및 체계화에 기여
- 한·중·일 경제협의회체를 통해 동북아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에 기여

▶ 연구책임자 이창재 선임연구위원

16

북한의 시장화 실태분석 및 경제체제 전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북한이 부분적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한 7·1경제관리조치가 발표된 지 10여 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는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계획경제 및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화 확산이 체제 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의 체제전환과 정상 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의 시장화 과정과 최근 북한의 시장화 확산 실태를 비교·분석해 북한의 시장화 추세 및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는 것은 상당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경제재건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시장개혁 및 대외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제 및 국제협력 방안도 검토, 제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북한 경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
- 북한경제의 시장화 확대 가능성 및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
-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통한 중장기 남북경제통합 가능성 및 정책과제 제시

▶ 연구책임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의 경제성장은 급속한 산업고도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한국 주력 산업과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국 기업의 주요 경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의 각 분야의 경쟁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그 중에서 연구개발 분야는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임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최근 기술도입에서 자체 개발로 산업정책방향을 전환한 이후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기업의 R&D 투자와 관련된 정책, 현황, 결정요인, 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국이 산업고도화 및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어 특히 고도산업 분야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특징, 추진방향 및 전략을 분석하여 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우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 중국 정부의 R&D 정책 그리고 기업유형별 R&D 투자 패턴 및 특징에 대해 정리하여 기초 정보자료로 활용.
-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양국 기업간 제휴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한중 산업협력 및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

▶ 연구책임자 이승진 연구위원

18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중국의 도시화율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은 각각 약 7억 명 씩의 인구를 담당하게 됨. 중국의 도시 확대는 궁극적으로 농업활동 적정 소요 인구로 추정되는 3억 명 정도가 농촌에 남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중국 도시의 확장은 새로운 소비시장의 탄생일 뿐 아니라 인프라 확대에 따른 관련 수요의 창출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및 무역 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요청됨.
- 또한 도시화는 인력 수급 구조와 물류 네트워크에도 변화를 가져와 제조업의 입지 조건을 비롯한 제반 생산 환경에도 변화를 일으키므로 재중국 한국기업은 이를 주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도시화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및 물 공급, 호구제도 완화, 인구이동 증가, 일자리 창출 부담 증가, 사회보장제도 확대, 토지제도 개혁 등의 사회적 과제를 떠안게 되어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의 도시화를 시장 창출, 제조업 환경 변화,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급변하는 중국의 여건에 따른 능동적인 대중국 무역투자 정책 수립에 기여
- 한·중 FTA 협상 관련 중점 산업 및 정책 작성에 기여

▶ 연구책임자 최필수 부연구위원

19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 방안 -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은 ADB를 통한 GMS program 참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국가와 양자간 ODA 사업 위주로 이들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EU, 호주, 중국 등은 이러한 지역개발에 참여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높여 왔음.
- 한국 정부는 2011년 8월 메콩 유역 국가(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들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동남아 중 특히 메콩 유역 국가는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족, 투자환경 불안정 등의 요인이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 농업생산성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며,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메콩 지역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역내 생산성 증진 및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전략 및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대상지역임.
- 메콩 지역의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서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남아 국가의 개발협력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한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함.
- 메콩 유역국의 지역개발 현황, 특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 분야의 협력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메콩 지역개발 참여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 정부의 메콩 유역국과 농업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기여
- 특히 ASEAN과 다양한 지역개발 협력체와 농업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참여 전략 마련에 기여

▶ 연구책임자 김태윤 부연구위원

20

ASEAN 국가들의 인력수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동남아 신흥경제국의 경우 인력수출이 국내실업 해소와 노동송금 수취라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인력수출에 대한 이해가 크고, 따라서 인력수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대외경제협력 심화 시 인력시장 개방을 요구할 요인을 가지고 있음.
- 동남아 개별 국가 수준에서 인력수출의 현황과 배경, 관련 정책 및 이러한 인력수출이 현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남아 경제협력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에 인력을 송출하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역외 국가에도 큰 규모의 인력을 송출하고 있어 그 패턴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분석은 해당 국가의 인력수출 이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ASEAN 국가들의 인력수출 현황과 관련 국가정책을 파악하여 한국정부가 양자협상 시 상대방의 인력이동 분야 개방요구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 활용하도록 함.
 - 인력수출의 규모와 대상뿐만 아니라 산업 및 직종 분석을 통하여 대상국가의 인력수출 구조를 파악하고 관련 국가정책을 유형화함.
 -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국가별 대응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 ASEAN 국가들의 인력수출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국내나 국외에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주노동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ASEAN 국가들의 노동수출과 송금수취의 구조와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FTA 협상 등 경제협력 심화 시 인력이동 부문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오윤아 부연구위원

21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비교와 시사점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거대 신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직접투자는 물론 FTA 차원에서도 대인도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07년 미국을 제치고 국가별 대인도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한 이래, 인도 내 투자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음.
-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진출에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일본도 2005년부터 대인도 투자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일·인도 FTA를 2011년 발효시키는 등 대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과 인도는 2005년 이후 매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델리-뭄바이산업회랑(DMIC) 등 초대형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수출을 급증시켜 인도 수입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의 발전소 및 통신, 건설 부문 등에서 진출을 주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싱가포르와 일본, 중국의 대인도 경험전략 및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 지원정책 개발과 기업의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대인도 진출 비전, 목표, 추진 체제, 성과, FTA 추진 및 업그레이드 전략, 투자분야 및 전략, 구체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성공적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일본, 중국의 정책 및 전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함.
- 우리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제안

▶ 연구책임자 조충제 부연구위원

22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세계적인 자원난과 중동 사태로 자원개발 대안시장으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안데스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자원개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3국은 좌파 정부 등장 이후 급진적인 자원국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인식돼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외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스페인,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원 선점을 위해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 중임.
- 최근 우리 정부 및 기업도 이들 국가의 높은 자원개발 잠재력을 인식,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현지 자원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협력 전략 부재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3개국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은 물론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

● 기대효과

- 현재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협력 대안 제시.
- 안데스 자원부국 3국이 모두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제시.

▶ 연구책임자 권기수 부연구위원

23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 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들어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이 새롭게 조명됨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건설 정책당국 및 업계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건설시장을 주목하고 진출 방안 및 정책 마련에 주력
- 본 연구는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및 잠재력,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 세계 주요국의 진출전략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효율적인 진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아프리카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및 개발 잠재력을 조명하고 한국의 시장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서 경험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원개발 연계 진출, 중국·일본·터키 등 아시아 또는 구(舊)식민종주국 기업과의 협력진출, 해외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 등의 정책 대안을 발굴

● 기대효과

-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또는 중동 및 아시아 등 기존 시장에서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초정보 및 진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신흥시장 개척 노력에 일조

▶ 연구책임자 박영호 부연구위원

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민(民)에 의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 붕괴는 중동국가에 만연한 권위주의 및 가부장적 가치체계가 변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포스트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주요국의 정치경제 체제 변화를 검토, 분석하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권위주의의 약화에 따른 경제적 권위주의의 약화가 예상되며, 특히 국가 주도 경제체제에서 다원화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
- 과거 부의 창출과 분배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부의 창출과 분배의 과정에 민(民)이 더욱 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산업다각화,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이 더욱 실려 기존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조업 등의 산업이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
- 기존 한·중동 경제관계는 에너지교역과 건설·플랜트 등 특정 부문에 치우친 단선적 협력을 위주로 이루어졌음.
- 민주화 과정에서 급변하고 있는 경제 환경을 진단해보고 기존의 에너지 중심 대중동 경제협력의 틀을 확장하는 신경제협력 방안 제시
-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가 8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전략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민주화 이후 현지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대중동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존의 에너지 중심 대중동 경제협력의 틀을 확장하는 신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책임자 한바란 부연구위원

25

DDA 협상타결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1년에 출범한 DDA 협상이 2012년도에 타결될 전망이 커짐.
- DDA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의 시장접근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규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DDA 협상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안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한 작업은 없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 타결 후 최종 협상안을 분석 평가하여 그로부터 각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 기대효과

- DDA 타결 결과에 따른 파급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DDA 타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DDA 협상 결과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연구책임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26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협력강화와 대응전략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ECFA로 이슈화되고 있는 중·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의 경제에 대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 중·대만의 경제통합에 대해 무역, 투자, 산업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홍콩은 CEPA가 9차까지 진행되면서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중국-대만-홍콩의 대중화경제권 부상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대만 ECFA, 중·홍콩 CEPA의 진행 외에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민족단합'이라는 과제하에 향후 중국·대만·홍콩 경제권의 결속 및 통합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기대효과

- 중·대만 및 중·홍콩 간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안경제 통합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중화경제권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전망을 통해 신아시아 외교정책 수립에 정책적 제언 제공

▶ 연구책임자 이승신 연구위원



부록

KIEP 조직도



KIEP 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업무분장
국제경제실	- 국제거시 및 금융분야의 현안에 대한 연구 - 지역 금융·통화협력에 대한 연구 -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연구 -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 산업 개방에 대한 연구 -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연구 - 국제금융센터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 남북한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연구 - 북미·대양주, 유럽 지역과 일본의 경제정책 및 대외경제관계 연구
협력정책실	- 한국의 무역·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 수출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 - WTO 및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에 대한 연구 - DDA 협상의 영향 및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 -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 세계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교연구 및 동향분석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연구 및 대외원조전략 관련 연구 - 국별원조전략, 부문조사 등 지역연구와 연계한 ODA 연구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연구 -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연구 -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 - 통일대비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및 북한 관련 개발협력 연구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업무지원
신흥지역연구센터	- 중국, 중동구, 러시아, 중남미, 동서남아, 중동·아프리카, 인도 등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 주요 지역별 대외경제관계의 현황 및 대환(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 주요 지역별 경제정책 및 제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 중국의 경제환경, 투자환경, 시장특성, 발전전략, 내수시장 규모/특성 등에 대하여 각 권역별 혹은 성별로 연구 - 신흥경제지역에 대한 국내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웹사이트 기획 및 운영 - 신흥지역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DB 구축사업

KIEP

조직별 업무 분장

부서	업무분장
지식정보실	• 정보자료의 선정 · 수집 · 검색 · 관리, 정보자료의 조직 · 소장자료의 DB화, 디지털도서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이용자 연구 주제별 프로파일 관리 및 정보서비스, 국내외 정보자료 관련 대외협력 • 전산정보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입수 및 운영 관리 • 근거리 통신망(LAN) 및 인터넷 관리,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국내외 데이터뱅크 연결 및 관리 • 연구결과물의 발간 및 발간과정 관리, 연구원 홍보자료 및 연혁사 편집 및 발간, KIEP Webzine 구성 및 발간 관리 • 홈페이지 발간자료 구성 및 PDF 파일 등재 관리, 발간물의 원내외 배포 및 회원제, 판매 관리 • 언론홍보, 대외협력, 온라인 뉴스레터, 연구성과 확대 관련 업무
연구조정실	• 사업경영혁신, 기관평가 총괄, 사업실적 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연구용역 계약,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전문가풀 • 인사관리 세미나 등 총괄지원, 복리후생, 보안 업무, 재산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국회업무, 규정업무, 감사업무, 회계 및 세무수탁연구용역 집행 관리, 국내외 출장

KIEP

2011년 예산 현황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9,153,245,000	계	29,153,245,000
I. 정부출연금	25,099,000,000	I. 인건비	1,559,000,000
II. 자체수입	4,054,245,000	II. 연구사업비	556,000,000
		III. 경상운영비	30,418,580,000
		IV. 시 설 비	

KIEP

연구원 현황

(2011. 12. 31 기준)

원장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기능직	합계
	위원급	원 급				
1	43	35	8	10	15	112

● 연구위원 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주 요 연 구 분 야
부원장	정여천	러시아 및 한 · 러 경제(독, 민현대)
연구조정실장	김홍중	유럽 연구 / 통상 / FTA(서울대)
국제경제실장	박복영	국제금융, 국제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서울대)
협력정책실장	김준동	서비스 / 외국인투자(미, 시카고대)
신흥지역연구센터소장	이장규	중국경제(미, 피츠버그대)
지식정보실장	김윤실	정보관리 / 정보정책(연세대)
선임연구위원	김상겸	아 · 태 경제협력 / 무역원활화(미, 펜실베이니아대)
	서진교	WTO 농업통상(미, 메릴랜드대)
	윤덕룡	금융협력 / 남북경협 / 거시금융(독, 키일대)
	이창재	경제협력 / 개발협력(프, 파리 I 대)
	정형근	경제협력 / 남북경협 / 경제특구(독, 쾰른대)
	조명철	북한경제 / 남북경협(북, 김일성종합대)
	조종화	환율제도 / 국제금융(미, 워싱턴주립대)
	최낙균	통상 / 무역(미, 텍사스오스틴대)
연구위원	권 율	ODA 정책전략(서강대)
	김규판	일본경제(일, 게이오대)
	박월라	중국경제(중, 사회과학원)
	이승신	중국경제 / 외국인투자(대, 국립정치대)
	이재영	러시아, CIS 경제(러, 모스크바국립대)
	이준규	FTA / 북미 경제(미, 남가주대)
	정 철	국제무역 / 문화 / 노동(미, 미시간대)
	정성춘	일본 / 환경 / 기술경제(일, 히토츠바시대)
	허 인	금융협력(미, 로체스터대)

 연구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 요 연 구 분 야
부연구위원	강대창	동남아 지역(미, 워싱턴주립대)
	강유덕	서유럽(프, 파리정치대)
	곽성일	아프리카 지역(미, 조지워싱턴대)
	권기수	남미 / MERCOSUR(한국외국어대)
	김부용	북경 / 천진 / 하북지역(서울대)
	김영귀	무역수지 / 농업(미, 미시건주립대)
	김종덕	지역통상(미, 미시건대)
	김태윤	동서남아 지역(미, 오클라호마대)
	노수연	상해 / 강소성 지역(중, 복단대)
	문익준	중국지역(중, 청화대)
	박영호	아프리카 / ODA(한국외국어대)
	배찬권	무역과 생산성 / 고용 및 임금(미, 인디애나대)
	사딕호드자예브 세르조드	국제통상법 / CIS 지역연구(고려대)
	서정민	무역과 환경(미, 보스턴대)
	안지연	국제금융 / 국제자본이동(미, 코넬대학교)
	양평섭	중국경제 / 산업 무역(한국외국어대)
	오윤아	동남아 지역경제(미, 오하이오주립대)
	윤성학	중앙아시아(연세대)
	이 웅	동서남아 지역(미, 캘리포니아대)
	이동은	국제금융 / 거시금융정책(미, 인디애나대)
	이상훈	산동 지역(중, 사회과학원대)
	장용준	FTA(미, 인디애나대)
	정지원	국제무역 / 국제개발협력(미, 플로리다대)
	정지현	중부 6개성 지역(중, 사회과학원대)
	조미진	무역과 개발 / IPR(미, 브라운대)
	조영관	중앙아시아(모스크바)
	조충제	인도 지역경제(한국외국어대)
	최필수	중국경제 / 한 · 중 관계(중, 청화대)
	한바란	아중동 경제(미, 코넬대)
초청연구위원	김박수	유럽(프, 그레노블대)
계	53명	

2011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1년 5월 31일
인쇄일 2011년 5월 20일
펴낸이 채 욱
펴낸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우)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78, 1179
팩스 02-3460-1144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홈페이지 www.kiep.go.kr
©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집디자인 · 인쇄 마루금기획 031-954-0711